

76

Vol.

제295임시회 · 296정례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제295임시회 • 296정례회

76

contents

개회사	04
본회의	05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3주년 결산	06
하트이슈	07
의원논단	08
도정 · 교육행정 질문	16
5분 발언	34
현장의정	40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41
의원주장	49
주요안건 처리현황	52
연구 및 토론	5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8
포토의정	60
느낌 여행 충남	66



충청남도의회소식지 제76호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편집 / 송우당담당실 기획홍보팀

전화 / 041-635-5102

팩스 / 041-635-5009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정대로 600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의 첫 날, 제296회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의 민생현장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내 가뭄이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령댐은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으며, 서산AB지구 등 서해 일원에서는 농업용수원의 염도가 영농한계치를 크게 웃돌며, 염해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기간에도 강우량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 장기 예보가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등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예비비 투입도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산임해산업지역’ 등의 해수담수화 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6 회계 연도 결산 심사’ 등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최우선에 두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1.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제296회 정례회 폐회...23개 안건 처리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점검...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안 가결-

충청남도의회는 6월 16일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15건 등 총 23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벌였다. 실제 총 13명 의원이 43건(도정 30, 교육행정 13)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사안 등에 대해 '송곳질'했다. 구체적으로 김종필 의원(서산2)이 청년실업의 근본적 문제점과 대책을, 김종문 의원(천안4)은 도교육청 3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사항 점검에 대해 질의했다. 이공희 의원(천안8)은 성과계약서 및 성과보고서의 세심한 작성 필요성을, 김홍열 의원(청양)의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대권도전으로 인한 도정공백 및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도의회는 이와 별개로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도의회가 23번째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선 15개 시군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 범위는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규칙 등에 대해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문 의원(천안4)은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다"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례회 기간 상임위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이어졌는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노후우를 공유했다. 윤석우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6 회계연도 결산감사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과 실태를 점검했다"며 "도민이 보다 활력 있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지난 3년, 도민 복리 증진 등 지방과 중앙 간 가교 역할 충실

-각종 현안 실태를 푸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가교 역할 충실...도민 대변자로 우뚝-
-총 373일 회기 기간 543개 안건 처리...도민 삶과 질 향상과 경제 협력 초점 등-

충남도의회는 지난 3년 성과를 요약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경제 협력에 앞장선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충남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실태를 푸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3년간 의정성적표

지난 3년간 40명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다. 총 26회(373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5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을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돋보였다.

실제 도 교통,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총 134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29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5건의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견제와 감시잘했다

도의회는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271건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116차례 발언대에 올라 370건에 대한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다. 또 도민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에서는 가뭄피해지역 농업용수개발 대책 등 210차례에 걸쳐 현안 문제를 진단했다.

◆국제적 위상강화

도의회는 지난해 제7회 동북아 의장 포럼을 개최, 한·중·일·러·몽골 등 5개국 10개 지방의회를 충남으로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동북아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선순환 구조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의정력을 쏟았다. 이는 도내 국제관광객 비율이 2~3%대로 미약한 만큼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빌판 삼아 백제 문화를 동북아에 전파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통한 문화·관광 경쟁력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향후 도의회는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대 등 심층적인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용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물어야 할 과제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후원회제도, 인사권 독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

윤석우 의장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와 정부를 뺏아다니며 설득에 나섰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아직 얻진 못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과제로 남았다.

윤석우 의장은 "지난 3년간 도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며 "충남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HOT ISSUE

“가뭄 피해 입은 충남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김응규 의원,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정부에 건의-
-충남 서북부 농업용수 공급 위한 저수지 준설 및 수계연결사업 등 시행해야-



충남도의회가 도내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6월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도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물 공급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서북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준설과 아산-삼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결의안에 담았다.

또 충남소재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등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대대적인 물 절약 홍보 전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15년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농업·공업·생활용수 등 도민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령댐의 저수율은 9.7%를 밑도는 등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한급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향구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의원
논단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농업인의 자세

김응규 의원(아산2)

지난해 세계 주요국가 지도자들이 참가한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돌이켜보면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한 기계화의 원성이었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가히 폭발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어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대량 생산체제를 가능하게 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기술과 전기기술을 이용해 생산과정을 자동화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산업과 바이오기술을 상호 융합하여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연 농업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인가? 우선 디지털 산업과 바이오기술의 융합을 통해 그동안 날씨 등의 자연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농업환경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농산품에 맞추어 자연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심지어는 개인 소비자 맞춤형 농산품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과다한 유통비용이 거의 사라지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탄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성 요소를 기술로 대체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미 농촌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된 스마트 팜이 실용화되어 농업의 근본적인 생산체계를 바꾸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고 있던 농업은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으로서 생산량은 기술보다는 경지면적에 더 크게 좌우되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시설재배와 스마트 팜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생산 혁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설재배는 더 이상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수경재배 기술은 토양의 생산성에만 의지하는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과 농업용 로봇의 결합은 주어진 제약 조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생육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농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떤 자세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 농업인들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제조업 등 타 산업으로부터 소외된 없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농업을 단지 먹거리 생산을 위한 수단이나 장소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일터이자 새로운 살터로서의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공학적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격변의 시대에는 준비에 따라 늘 기회와 도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기가 발명된 뒤에도 양초는 사라지지 않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확산에도 여전히 종이와 연필의 인기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뜨거운 정서적 교감으로 탄생된 전통적 농산품은 단순한 농산품을 뛰어 넘는 시대의 문화로 진화할 것이다.

의원
논단

인절미를 생각하며...



윤석우 의장(공주1)

며칠 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빠 모두 모여 저녁 먹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모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손주의 재롱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후식으로 여러 주전부리가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한 것은 인절미였다. 부드럽고 쫄깃한 질감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고소한 콩고물은 혀를 즐겁게 했다. 손주는 더 달라고 야단법석이었다. 이처럼 남녀노소 좋아하는 인절미를 보며 느끼는 바가 있었기에, 오늘은 인절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먹던 인절미지만, 인절미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절미는 조선 중기에 내 고향 공주에서 만들어진 떡이다. 조선의 16대 임금 인조는 신하인 이괄이 일으킨 난을 피해 공주 공산성까지 피난 오게 되었다. 난리 중에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을까. 심신이 지치고 배고픈 임금을 위해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콩고물에 묻힌 떡을 만들어 바쳤다.

인조가 맛을 보니 떡이 참 뛰어나다. “그것 참 절묘한 맛이로구나. 이 떡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지만 처음 보는 떡이니 신하들도 이름을 알 리 만무했다. 이에 ‘임씨가 만든 절묘한 맛의 떡’이라는 뜻으로 ‘임절미’라 칭하다가, 발음상의 편의로 ‘인절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일반백성이 아무리 맛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들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까. 그저 지역적 명물이 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임금의 극찬 한 번으로 인절미는 조선 방방곡곡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알려진 인절미는 맛도 맛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 돋보이는 떡이다. 인절미 고물은 콩가루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흑임자, 깨, 잣 등 먹는 사람 기호에 맞게 물리기 나름이다. 먹는 방법에도 정답이 없다. 불에 구워먹기도 하고 기름에 지져 먹기도 한다. 조청에 찍어 먹으면 꿀맛이다. 최근에는 인절미와 빙수를 결합한 상품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인절미가 하나의 고물, 하나의 먹는 방법만 가능한 떡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중적인 사랑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갖가지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절미의 유래를 되새겨 지도자가 가진 영향력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라는 마음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인절미가 가진 유연함과 포용력으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 지도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의원
논단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거는 기대

윤석우 의장(공주1)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라는 조금 낯선 정책이 등장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이 사업의 개념은,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복지기관, 지역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땠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최근,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다음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2017년 3월 광주 동구의 한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최 모(71세)씨는 경찰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말했다. 구형이 나서서 조사한 결과, 최씨는 앞서 몇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 시장을 지나다 허기에 지쳐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간 것이다.

그의 통장 잔액은 1만원. 시장에서 허드렛일을 해서 번 돈과 기초연금 20만 4천원이 매달 수입의 전부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어 가족도 없다. 게다가 청각장애자다. 이렇게 보면 그는 기초수급자, 법정장애인, 긴급복지지원 대상이다. 다행히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만, 나머지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행이 아닌 김치를 훔친 대한민국의 현대판 장발장이 되었다.

행정전산망이 세계 수준급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김치를 훔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기초 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가 '본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어서 신청하되 혹시 주변에서 막한 사정을 알게 되면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보 전산화가 잘 되어있고 복지지원체계가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복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복지를 제공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청주의 원칙을 유지하되 복지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들 늘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에서는 후자의 시각에서 복지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하게 될 역할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통합서비스 지원'이다.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셋째, '민간조직과 자원 활용'이다. 이·통장과 봉사단체 등 각종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다'는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지정책에 대해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볼 때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의원
논단

지방공공외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¹



유병국 의원(천안3)

‘공공외교법’(2016.2), ‘국제문화교류촉진법’(2017.3) 제정을 계기로 지방공공외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지난 20여년 간 지방정부는 매우 큰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이제 지방공공외교도 커다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시대적 전환의 관점에서 지방공공외교의 방향성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의 글로벌 변화 및 지방의 위상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방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함을 밝히고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공공외교의 지형 변화

1990년대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해 지방공공외교의 물적 기초가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990년대는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새로운 전환이 시작된 시기였다. 특히 지역정책시장의 형성,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환, 중국의 부상은 우리나라 지방공공외교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 지역정책시장의 형성

냉전시기 국제 관계는 전영논리가 압도적이었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질서 속에서 지방은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기껏해야 국가의 방침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방편으로 지방공공외교가 고려될 뿐이었다. 1990년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를 냉전 질서가 허물어지자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92년 리우정상회담이었다.

전영 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개발 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은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길을 모델로 삼았다. 이들 국가의 지방정부 또한 먼저 산업화, 도시화의 길을 걸었던 선진국 지방도시의 경험을 참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이나 체제전환국의 지방정부에서 지역(도시) 정책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폐기물, 도로, 임대주택 등 지역 정책 수요 형성에 따라 신흥국 또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 촉진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

지역 정책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기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선진 지방정부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민간부문은 공공정책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국제기구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공동행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역 정책에 관한 공급자는 앞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 지방정부였다. 나라마다 그 대응 방식은 달랐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무상지원과 기술 원조를 협력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파트너의 기술과 표준 선점하는 방식을 따랐다. 프랑스 모델은 공공부문이 해외에서는 영리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그 기업이 공공부문이라 할지라도 해외 사업에서는 철저히 영리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프랑스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의 관계를 반영한다. 네덜란드 모델은 혹은 독일 방식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상지원을 하며 수렴한 모델을 근거로 타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식이다.

1 본 글은 『충남 지방공공외교 10년전연구』(충청포럼·김수현, 2017, 충남연구원)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2 리우선언의 「의제21(Agenda 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세 부실한계획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1998년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이는 학술적으로 프랜차이즈 모델(franchise model)로 불리기도 한다.

글로벌 기업들도 지역 정책 시장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장진입과 관련한 기업들로는 독일의 지멘스(Siemens), 미국의 GE, 맥킨지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의 상수도, 에너지, 대중교통 등 공공인프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맥킨지가 지난 2012년 서울시에 조직진단과 정책 제언을 수행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정책 시장에 진입한 대표적 사례다.

국제기구는 시장적 방식보다는 비시장적 방식 특히 지역 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기본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그리고 지구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 NGO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환경, 인권 등을 매개로 한 인류의 보편적 생존 및 권리 확대를 위한 행동에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들이 핵심 주제로 나서며 그들 간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정책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자 지방외교는 지역 정책 시장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가 교류되고 때로는 거래되는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환: 학생에서 선생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의 진전을 동시에 이루어낸 드문 나라다. 특히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1996년 OECD 가입을 전후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하였고, 2004년 KDI는 개도국에게 개발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KDI School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 정책 경험과 노하우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큰 참고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00년 이후에 이러한 전환의 행사가 섰었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국제기구의 유치와 정책 수출 두 측면이다. 2006년 포항시가 NEAR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인천시가 GCF 사무국을 유치하였고, 2014년에는 서울시가 MITI 연수원을 유치하였다. 이는 국제적 지위 변화에 걸맞은 국제기구를 갖고자 하는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정책 수출 관련하여서는 2012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필두로 2014년 인천시가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 CEO 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 수출 드라이브는 비록 체계화되지 않았고 성과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지역차원에서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외교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중국의 부상

환황해권 시대를 이야기하는 담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실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는 환황해권 국가들의 경제성장, 권역 내 무역의 증가, 세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부상은 단지 일개 국가의 경제성장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구적 차원의 일대 사건이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웃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유사한 인구규모를 갖는 인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

1992년 수교 이래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가 외교뿐 아니라 지방 외교에서도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은 13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행정위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 층계가 3단계(시도-시군구-읍면동)인데 반해, 중국의 4단계(성-지급-현-향진)이다. 우리의 지방공공외교는 중국의 성급 이하 지방정부를 상대해야 한다. 충남의 자매결연 성인 해베이성은 인구가 7천만에 달한다. 그리고 충남 시군의 중국 측 자매결연 지방정부도 대개는 인구 몇 백 만 규모다. 중국과의 현격한 인구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지방공공외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부상은 지방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재삼 일깨우고 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모색할 때 우리는 중국을 나라라기보다는 대륙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 충남을 예로 들면, 현재 중국과의 자매결연 파트너는 해베이성 한군데인데, 앞으로는 중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다 자매결연 파트너관계를 맺고 지방외교를 펼쳐야 할 상황이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중국과의 지방공공외교에 관한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현재 EU에는 27개국 5억의 인구가 있다. 중국은 13억 인구가 있다. 우리가 EU에 쏟고 있는 외교역량 이상으로 중국과의 외교에 역량을 쏟아야 할 상황이며, 지방공공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2.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충남도를 중심으로

1991년 도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 취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체가 확보되자, 지방외교는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정치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또는 일부 중앙정부 인사들의 추천 등을 통해 자매결연관계를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IMF위기는 우리나라 지방공공외교의 중점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정부는 1998년 9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지방정부가 투자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지원업무가 지방공공외교의 핵심영역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서울의 우수정책 사례를 해외로 수출하는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MITI연수원 유치(2012)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경기도는 통상지원 일변도 정책을 벗어나서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제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적·조직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 지방공공외교는 전략적 관점의 미흡, 통상 지원 편중,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란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전략적 관점의 미흡

지방공공외교는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와 전략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공공외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그 방향성과 중점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임의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단기성과를 바라고 지방공공외교가 조급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공공외교의 전략적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지구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구촌에서 해당 지역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글로벌 위상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한 단계 공공외교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야 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제상이 있어야만 한다.

충남을 사례로 들자면, 충남이 우리나라 내지 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 범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고민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1995년 이전 시기에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정부의 국토개발과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집행단위로서 독자적인 고민을 할 여지가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수출 제조 대기업을 매개로 급속도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러서 충남의 글로벌 위상을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글로벌 위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고려한 공공외교의 시대성을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만 공공외교의 임의성 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 통상지원 편중

한 대부분 지방의 공공외교는 투자유치, 수출지원, 관광객유치 등 통상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논점은 통상지원 업무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 그 업무에 지방공공외교의 역량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공외교와 국가공공외교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수출입국”이라는 중상주의적 정책기조가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쉽게 연결되는 통상지원에 지방공공외교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충남을 예로 들면,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현재 경제산업실의 기업 통상교류과가 주무부서다. 2017년 기준 기업통상교류과는 산하에 기업지원, 기업금융, 통상지원, 국제협력, 중화권팀, 아자팀을 두고 있다. 비록 미래성장본부의 현황해팀이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충남의 국제교류업무의 주무부서는 경제산업실의 기업통상교류과다.

그런데 공공외교의 통상 지원 편중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4 이때 자매결연 체결은 사실상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 이에 대한 학술적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2015년 송두빈·송원표의 『현황해설과 미래의 도약』 충남 의 미래, 2018년 발간된 『충남의 미래 2040: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이다.

있다. 우선, 통상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관련 의사결정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다. 이를 지방외교 의제로서 외국의 지방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은 활동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지협)의 기저 원리인 경쟁은 지방외교의 원리이어야 할 협력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지방외교가 이러한 경쟁원리가 아니라 협력의 원리로 구성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각 국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차이 특히 민간과의 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상은 호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⁶.

(3)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

국제교류관계는 다양한 측면들에서 혼선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국제교류관계 파트너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방외교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축은 친선, 통상, 정책인데, 각각 파트너 선정의 원칙과 기준이 상이하다.

친선은 인적 친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교류 파트너 기준은 친밀성 또는 친할 필요성이다. 이와 달리 통상에 있어서 파트너 선정 기준은 상호 보완성이다. 내가 판매자이면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지역 또는 잠재구매자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논리대로라면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충남 태안군은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의 구(區)와 국제교류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외교는 통상 기준과 달리 파트너 선정에 공통성을 핵심으로 한다. 유사한 처지에 있는 지방정부끼리 많은 공통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표] 국제교류 지역 선정의 기준 비교

구분	친선	통상	정책
파트너 선정 기준	친밀성/인적 필요성	상호 보완성	공통성
주요 활동	문화, 스포츠 교류 공무원 교환 근무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 관광객 유치	정책 교류 및 협력 공동 활동
장점	- 상호 이해, 친선 애호 유조 - 교류의 역사가 깊은 상황에서 적절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경로로 주민들의 확보 유치	- 지방정부 간 협력이 지속가능성 있음 - 세련된 방식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단점	- 콘텐츠 및 인력이 없으면 지속성 약함	- 지속성 여의문 - 경쟁우위 상실하는 국제외교에 부합함	- 상당한 정책적 준비와 노력 필요 - 주민들의 확보 및 참여

자료: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연구』, 홍원표·강수현, 2017, 충남연구원

6. 가령, 충남도지사와 허베이성장이 만나 상호 투자유치를 논할 경우 충남도지사는 인간의 투자유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허베이성장은 산하 국유기업의 투자에 영향력이 있을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이러한 여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 지방공공외교의 정책 외교로의 전환

현재 충남뿐 아니라 대다수 지방정부는 통상지원 외교 단계에 서 있다. 어느 지방정부도 정책 외교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다. 친선, 통상, 정책은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독자적 차원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 외교로 전환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충남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와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 국제화, 그리고 세력화가 필요하다.

(1) 지방공공외교의 전략화

지역은 이제 공공 외교에서 임의성을 탈피하고 공공 외교를 핵심전략의 일부로서 정립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전략화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공공외교를 지역의 핵심발전전략과 긴밀히 연계시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기초 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전자는 공공외교를 충남의 전체전략의 일부로서 정립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공외교를 자체의 완결된 체계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충남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공외교의 중장기 전략을 별도로 수립한 적이 없다.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어야만 한다. 최근 〈공공외교법〉, 〈국제문화교류촉진법〉이 제정되어 광역지자체장은 관련 지방외교 실적과 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차제에 이를 지방공공외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 계획 없이 그저저력 대응해 나갈 수도 있으나 이는 임시변통일 뿐이다.

일려진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미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방공공외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체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집행,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내부적으로도 공공외교의 전략화를 요청받고 있다. 우선 충남 지역의 대학들을 필두로 시민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들은 매우 활동적으로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는데, 민간의 움직임에 비해 공공부문의 움직임은 뒤처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충남에는 약 9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국에서

7. 새로운 지방공공외교는 자신의 교류를 위상을 정책화 인식한 기초위에서 수립해야 한다. 충남을 예로 들면, 충남은 지난 1960년대 본격화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간 충남은 수도권 및 대권역의 농촌 배후지에서 세계적인 산출공업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충남은 지난 2000년대 기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은 지역이며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었다. 한 충남의 교류를 위상은 '경제중심권에 입접한 신공업지구'를 꿈꾸는 '도농융합지역'이라고 규정한다.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러한 상황은 충남의 공공부문이 더 이상 공공외교를 그때그때 세워서 나가기에는 이미 충남이 안으로부터 국제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지역정책 경험의 국제화

정책 콘텐츠는 지역 정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리킨다. 이는 상하수도 정책, 산업단지의 관리, 대중교통망, 임대주택, 폐기물 등 지역차원에서 기획되고 집행되는 정책영역이다.

그런데, 각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역정책경험과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지역의 글로벌 위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이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충남은 어떠한가? 타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충남의 정책 노하우는 어떤 수준인가? 충남은 위성형 신산업지구의 전형적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범위에서는 충북이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며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가? 외부로부터 제조업의 이식을 통해 급격한 공업화를 이룬 지역은 충남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으로 부상한 국가들의 대다수 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문제이기도 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충남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동아시아의 어느 지역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 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장차 걷게 될 길이기도 하다. 이때 충남의 지역정책 경험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들 지역들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다. 또한 충남도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서 앞서 유사한 발전경로를 걸었던 선진국의 지역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점도 강조되어야만 한다.

충남은 정책 외교에 아직 본 궤도에 오르고 있지 못하다. 내부적으로 충남의 우수정책사례를 선별하는 기제도 없고, 더욱이 이를 전수할 채널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세종시로 이전한 KDI School과 협력을 통해 우수 정책을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채널을 확보하여 개도국의 지방정부에게 충남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방정부의 국제 세력화

공공외교가 높은 수준에 이르면,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동 목표를 가지고 공동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실제

행동으로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으로서 매우 높은 공유수준과 내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네트워크나 조직의 구성에서 시작한다.

현재 충남은 비록 국제조직에 일부 가입하고 있기는 하나, 주도적인 참여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NEAR),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또한 국내의 타 지자체가 이미 사무국이나 의장국으로서 현재 충남이 주도성을 발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주요 이유는 충남의 정체성이 반영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의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조직이 아니어서 충남은 발언권이 약할 뿐 아니라 주도권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럼 충남이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선 내용적으로 충남이 당사자 즉 이해관계자이어야 한다. 충남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느슨한 조직은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뿐 더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내용적으로 충남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거나 그러한 활동이 가능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충남과 글로벌 위상이 유사한 또는 충남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은 지방정부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충남은 국제무대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 네트워크의 결속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 현재 충남의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국제 협력 및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 내부적으로 공공외교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한 합의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 및 지지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을 허용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충남을 예로 들면, 충남은 자신과 유사한 글로벌 위상을 갖고 있는 외국의 지방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충북, 중국에서는 허베이성과 장수성, 일본에서는 쿠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이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방정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국제세력화방향일 것이다.



도정·교육행정 질문



유병국 의원

Q1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2009년에 282개, 2010년에 200개 정도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하던 것이 2013년에는 38개, 2014년에는 32개로 줄었음. 이 때문에 우리 충남경제가 많이 쇠락했던 것이 사실임. 문재인 정부의 충남 관련 공약을 보면, ①수도권 규제 철폐 ②천안아산 KTX역세권을 R&D 직접지구로 조성 ③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 ④북부권역 미래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⑤서북부권 충남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⑥서산~천안~청주~울진 동서내륙철도 추진 ⑦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요금제 적용 ⑧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⑨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등임. 역대 대통령 후보 중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관련 공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각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기바람.

A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역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주요 국정기획 과제를 정리하게 된. 우리 도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과 공약정리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기획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더 모아서 내실 있는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Q2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성환중축장)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방역 및 연구 환경이 악화되고

구제역·AI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께서도 이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였음. 중축장 이전 후에 약 126만 평의 국유지 활용 방안이 문제임. 본 의원은 이 부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제안하고자 함.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면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충남 쪽으로 이전이 예상되지만 산업단지가 없으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기에 미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함. 아산이나 천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의 집적지로 그동안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여 소프트웨어장비, 무선자율주행, 제어계측장비 등 공동시험장을 구축한다면 126만 평의 아주 좋은 산업단지와 연구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성환중축장 이전 후에 국가산업단지 건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기술융합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답변바람.

A2 향후 적극적인 사용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와 논의토록 하겠음.

Q3 충남소방본부는 2012년 10월 제9차 소방력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천안시 청당동 477번지에 가칭 청당119안전센터를 신설 확정하고 2013년 10월 건축설계를 착수, 2014년 4월 건축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음. 이 119안전센터는 약 20여억 원의 세금을 들이는 사업으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고 있고 시공사는 부도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항에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해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11월 부도 당시 해지하고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도 소방본부는 2014년 11월에 이 청사 준공을 예정해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119지역대에 청당119안전센터를 개소하고 인력 14명, 장비 3대를 배치했음. 이 인력과 장비도 결국은 원래의 목적대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함. 도심 가운데 홍물로 3년씩 방치한 것에 대해 도 소방본부의 입장을 답변바람.

A3 청당119안전센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4일 건축공사 착공 이후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정을 40%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음. 소송문제는 최종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입찰 하지 못해서 준공이 지연되었음. 천안시는 지난 4월 사업을 재개했으며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준공과 동시에 개청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음.

Q4 우리 도내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현황을 보면 하천 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은 2013년 12월 31까지 청구된 것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음. 지방2급 하천은 이 법에 매수청구권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고, 보상 못한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현황은 얼마인지 답변바람. 공주 장기면 송선리에 있는 땅이 개인 땅이었고 하천은 그 뒤로 돌아가 있던 것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반듯이 하천을 내고 개인 땅을 보상도 없이 30여 년간 국가가 무상으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자기땅은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작 본인은 국가 소유 하천 땅을 경작하는데 임대료를 시청에 내고 있다고 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권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A4 우리 도내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비는 약 6,84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도내 약 4,700여 필지 2,060만㎡의 사유지가 현재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되어 있음.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지방하천 보수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겠음.

Q5 1997년 경기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되었던 A교사가 2002년 3월 1일 다시 충남교육청에 신규 임용되었음. A교사는 2016년 2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2016년 6월 파면되었으며, 2017년 5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 2002년 충남교육청에서 임용 시에 면접관들이 면접사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해태한 것임.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무려 성범죄가 4배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성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교육하고 예방하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람.



김충열 의원

Q1 지난 5월 '장미대선'이라고 하는 대선이 있었음. 지사님이 대선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바람.

A1 지방정부의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과 개인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국정전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점이며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음.

Q2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에 후보자 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했음. 과연 이 법이 정말 잘된 법인가를 생각해 봤음. 그 법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바람.

A2 대부분의 선출직 정무직들은 그 임기와 선출 과정의 도전과정은 늘 겹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함.

Q3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내가 당선이 되면 나 대통령에 나가겠다"라고 선거공약을 내걸었다거나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이야기했다는 것을 언론 자상에서 본적이

없음. 단체장 중에서 대권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한 다음에 2년, 3년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더 성장할 기회를 잡은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A3 현재의 선거제도는 불가피한 제도적인 규칙이라고 봄.

Q4 지난번 지사님께서 경선에 나가셨을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는 잘 가고 있다. 안 지사님께서 그동안 해 왔던 시스템 그대로 충남도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장이 없어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면 단체장들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함. 청양의 인구가 3만 3천명임. 작은 동네는 이 시스템을 더 작게 응용을 잘 한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그러면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 모든 지역이 도의 시스템을 받아 응용을 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시스템화 시키면 단체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A4 대선 도전 과정에서 혹시 도정에 공백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더 챙겨보겠다는 약속 말씀 올림.

Q5 우리 도는 기초연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정액보조를 제도를 시도하고 있을 이보다는 중앙정부와 같이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이 낫다고 봄.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증대하는데 시·군의 복지재정 부담은 자꾸만 가중되고 있을. 국가의 국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의 기초연금 비율은 40~90%로 자금을 해주고 있을. 우리 도는 중앙정부에서 고령화, 저출산 내지는 복지수요 등을 따졌을 때 70~90%를 가지고 오고 있을. 우리 도는 일선 시·군에 정액보조를 제도로 해서 2대 8로 하고 있을.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와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자체한테도 똑같은 2대 8의 정액 보조를 제도로 한다면 중앙정부와 연계성이 떨어져 도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A5 시·군의 재정구조가 차등보조로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하겠는지 지금과 같은 그런 정액보조로 가는 것이 현재 도의 재정에서는 최선이겠는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음.

Q6 청양 중심부에 있는 청양정보고는 1977년도에 개교해서

2009년도에 폐교되었으나 8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음. 본 폐교는 대지가 14,090㎡이며, 건물 연 면적이 5,790㎡로서 4층 규모로 상당히 큼. 다른 광역단체에는 교육박물관이 많이 있지만 충남에는 교육박물관이 없음. 공주시 금충동에는 충남교육연수원과 외국어교육원, 학생수련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체험관이 또 들어설 예정임. 그곳은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람.

A6 좀 비좁기는 함.

Q7 충남교육연수원에서는 현재 교원연수와 일반연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양정보고에 교육박물관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연수원을 분리시켜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해봄. 또한 나머지 공간에는 도와 충남도립대가 연계하여 청년일자센터 내지는 천안의 테크노파크와 비슷한 청년T/P 형태로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청양은 충남에서 자리적으로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 청년T/P 형태로 일자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도와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의 하나로 이 센터가 마련되면 좋겠음. 그래도 공간이 남는다면 청양군 지자체와 상의하여 나름대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함.

A7 재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Q8 도내 시·군 교육장들이 교육장을 하고 나서 임기가 2~3년이 남으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퇴임할 때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년이 3~5년 남았어도 교육장으로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명퇴하겠다는 분들이 교육장으로 근무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함. 또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어떨까 생각해보면서 교육감께서 충남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면 교육장부터 변화의 큰 바람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건의 드리는 것임.

A8 해당 부서와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음.



강웅일 의원

Q1 2014년 이래 지금 3년째 가을인데 100년 빈도의 가을이라고 예기를 하고 있을. 요즘에는 모내기철이면서 작물을 심는 철이라서 파종의 어려움이 있고 모내기가 어려워 농민의 가슴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을. 이 가을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올 수 있으며, 2030년에는 최악의 강우량을 예상하고 있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A1 도에서는 지난 5~6년 전부터 중장기 충청남도 물 공급에 대한 계획을 계속 점검해 왔을. 또한 지난 5년 동안 지하수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을.

Q2 이렇게 심한가물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하수도 고갈될 결국은 지하수라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땅에 침투해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님. 현재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92% 정도 되고 있을. 약 8% 정도의 도민들은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발작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관정을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만 발작물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지원 및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볼. 중앙 정부에서 예비비를 고작 166억 원 지원한다고 하지만 1,660억 원을 지원해도 해갈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너무 적은 액수임. 도에서는 여러 가지 용수대책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혜택이 못 미치는 지역이 아직도 있으며 상수도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함. 현재 보령댐 저수량이 9.8%로 돼 있는데 그 수량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임. 금강 물을 이용하는 도수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대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또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2 우리는 물 공기 등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던 소비재가 정말로 비싼 소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인식하여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Q3 지난 겨울에 우려했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금년에 충북 보은과 경기 등 전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는데 충남은 아직 발생 안했으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계속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충남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었을. 하지만 일본 돗토리현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령을 했었기에 조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앞으로 초기대응을 잘하면 이렇게 자주 파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I는 사육환경 개선과 같은 방역체계 확립, 방역장비 현대화 등 농가들이 편안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도의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A3 허가된 구역화에 농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 양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음.

Q4 4대강 및 삼교호의 수질이 나쁜 이유는 축사 오폐수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될 때까지 때문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된다면 아무래도 수질이 훨씬 좋아질 것임 일본의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10년 전에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있어도 끝나지 않을 것임. 앞으로 도에서도 축사 오폐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이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A4 예, 더 노력하겠음.

Q5 소나무재선충이 금년 부여, 홍성에 또 발생했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8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이에 대해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예방하고 방역에 더 힘을 쓰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임. 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A5 앞으로 일선 시·군을 더욱 더 독려하고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여 재선충 방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Q6 백제문화단지 롯데 민자사업이 원래는 2015년에 준공하기로

했다가 2017년 금년으로 미뤄졌다가 다시 2018년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을 롯데 측에서는 어뮤즈먼트 파크, 스파빌리지, 팜파크, 어그리파크를 금년 7월 1일부터 착공한다고 하니 지사님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A6 올해 내로 실을 떠서 내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Q7 쌀값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문제가 많이 있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이 아니면 생산을 못할 소비 지체가 모든 것이 고품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배면적의 3분의 1을 버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음. 수매는 국민이 원하면 100% 다 해주고 있음. 이처럼 일본에서는 50여년 전부터 이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쌀이 공급되고 쌀값도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일본인한테 직접 들었음. 즉 일본은 쌀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매를 원할 경우에는 받아 주고, 또 쌀을 생산농가들이 시중에 팔아도 비슷해서 큰 문제가 없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중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밀 재배를 유도하지만 농가들은 수확하기 위한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7 기존 농정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김종문 의원

Q1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창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했음. 이 조례에는 조기 과몰입 학생·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A1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음.

Q2 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됨. 우리 도가 교육청에 지불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감사말씀을 드림.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9개 사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11개 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음. 지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길 당부드림.

A2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 업무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좋은 지역교육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음.

Q3 본 의원이 지난해 교육위원 시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2단계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 감사관은 몇 건이나 감사했는지 답변바람.

A4 없었음.

Q5 2단계 스쿨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본 의원이 80억 원 이상 많게는 100억 원까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정도로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관의 감사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함. 3단계 스쿨넷 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 조작 및 평가위원 부당행위로 2016년 10월에 충남교육청 전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음. 현재 수사진행 상황과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바람.

A5 검찰에서는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음.

Q6 검찰에 기소 또는 법규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라 2016년 10월 5일자로 2명의 전산 공무원에게 직무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전산공무원 A사무관은 스쿨넷 사업 관련 운영에 관한

직무증지를 받았고, B주무관은 전산 관련 업무를 배제하는 직무증지 명령을 받았는데 도 교육청에서 직무 증지명령 처벌을 내렸다는 두 직원이 최근 3개월 동안 업무현황을 보면 명령에 배제된 업무에 관계해서 일을 하고 결재를 해 왔음. 그래서 도 교육청이 '제 사구 감싸기', '술병맛이 처벌' 얘기를 듣는 것임. 직무 명령을 어긴 직원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처벌사항을 사후에 보고하기 바람.

A6 예. 그렇게 하겠음.

Q7 3단계 스몰넷 사업 관련 화선사용료로 도 교육청에서 통신 사업자에게 185억 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 감사결과에 의하면 통신사업자는 202억 원도 도 교육청에 재투자한다고 함. 도 교육청이 통신사에 185억 원의 통신비를 내면서 통신사업자가 202억 원을 도 교육청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어떤 장비를 재투자해 주며 어떤 부분에 투자비용이 202억 원인지 그 장비의 가격이 정말 공정한 가격인지도 꼼꼼히 교육청에서 따져보고 통신사와 계약하여야 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학교에 있는 보안장비가 사실 보안장비로서의 역할도 못하지만 아주 불량한 장비이기 때문에 742개 설치한 100억 원대 가까운 장비 같은 예산낭비였다고 지적한 바 있었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742개 학교에 설치한 통합 보안 장비가 불필요하기도 하고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음. 그래서 다음 3단계 사업에서는 하지 말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스란히 하고, 거기다가 보안스위치까지 더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음.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 바람.

A7 이문제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비슷한 사항으로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나 조달청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Q8 교육감님은 제16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단 한 번의 업무상 비리가 적발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시겠다고 제도 설명을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동안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된 공직자가 1명도 없음. 2015년 1월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까지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였음. 3단계 스몰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L통신사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경쟁 업체인 S통신사에 문자를 잘못 보내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음.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제외되는지 답변 바람.

A8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함.

Q9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자원해서 책 읽는 수업을 하는 것이 스마트교실임. 우리 도내 520여 개 학교가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운영하지 않고 태블릿PC는 캐비닛에다 전부 다 보관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정이 안 되고 있으며 스마트교실이 교육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 바람.

A9 스마트교실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으나 충남에는 전자출판까지 갖춰진 스마트교실이 아직 부족한 편임.



홍성현 의원

Q1 우리 도는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충남농어업 6차산업센터를 2011년에 설치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6차산업분야의 인력을 보면 도본청에는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으로 팀장 1명을 비롯한 팀원 3명 등 총 4명이고, 충남농어업 6차산업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비롯한 연구원 2명, 계약직 3명 등 총 6명.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팀장 1명, 연구원 1명, 계약직 1명 등 총 3명으로 전체 인원 13명이 6차산업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13명이 추진 및 관리하는 주요 업무는 관련 분야 육성 사업, 역량 사업, 판로지원 사업 그리고 컨설팅, 농식품부 연계 판로 지원, 6차 제품 판로 지원 사업, 식품안전 대형 유통점 입점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음. 많은 업무에 비해 추진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

전문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바람. 또한, 6차 산업 경영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사업환경 등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생기업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답변바람.

A1 6차 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가 하는 것들과 비교하여 우리 도에 인력 충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업무 분석을 해서 6차 산업화에 대한 도의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Q2 도내 전체 어린이집 정원 87,980명에 현원은 62,163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0.7%를 보이고 있음. 시·군별로 충원율을 보면 15개 시·군 중 평균 충원율 70.7% 이상은 천안·서산·계룡·당진·홍성·태안 등 6개 시·군이고, 나머지 9개 시·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음. 충원율이 가장 높은 천안의 경우 정원 25,227명에 현원은 18,784명으로 74.5%이고, 가장 낮은 부여의 경우 정원 1,911명에 현원은 1,064명으로 55.7%에 불과할 정도로 충남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적어 운영자들이 폐원 때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또한 도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을 고려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민간 어린이집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내지는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람.

A2 앞으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국공립으로 좀 더 확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좀 더 국가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림.

Q3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에게는 미세먼지가 더욱 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됨. 이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내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의 공기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바람.

A3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든지도 자체 재원을 확보하든지 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Q4 충남도내 전체 유치원 정원 37,069명에 현원은 28,213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6%를 보이고 있음. 시·군별로 보면 15개 시·군 평균 충원율 76% 이상은 천안·아산·계룡·당진 등 4개 시·군이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음. 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공립 단설의 경우 정원 2,901명에 현원은 2,785명으로 96%로 높게 나타났고, 공립 병설의 경우 정원 10,833명에 현원은 7,249명으로 67%이며 사립의 경우 정원 23,335명에 현원은 18,179명인 78%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홍성지역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기존 12학급, 정원 240명 규모를 1주일만에 13학급, 정원 260명으로 증설을 추진하여 사립은 물론 공립병설 유치원 원아 충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균형 있는 유아교육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 유아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사립, 공립병설 유치원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충원율을 고려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람.

A4 앞으로도 원아 수를 감안한 유치원 학급 수 조정, 교육환경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할하겠습니다.

Q5 충남 유·초·중·고 모든 743학교에 33,743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때 제대로 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세균에 오염된 실내공기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무입되어 냉방병, 호흡기질환, 두통, 폐렴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하지만 학교장의 관심 부족, 청소예산이 지원, 명확한 냉난방기 관리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청소와 살균·소독을 못하고 있다고 할 도교육청에서도 교실 소독을 하거나 공기질 측정은 하지만 냉난방기 세균검사나 살균·소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당 8~12만 원 정도 하는 전문청소비용이 부담돼 살균·소독은 엄두도 못 내고 필터만 청소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또한 일선 학교의 냉난방기에 대한 정기검진, 청소, 세척시기 및 요령 등을 담은 명확한 지침 내지는 매뉴얼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냉난방기를 통해 위험받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 정책이 무엇이고 교실내의 공기정화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람.

A5 2015년 이후에 보완된 지침서를 만들어서 매뉴얼로 일선학교에도 보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음. 앞으로 학교 운영비에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현황과 청소 관리상태 등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음.



맹정호 의원

Q1 요즘 서산은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매립장,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음. 집단민원의 내용은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미세먼지나 악취 등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큼. 문제인 대동령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도에서도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도 했음. 특히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음.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 제철이나 화학, 경유차,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195개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대산지역이 인도의 석유화학단지인 잠나가르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발표를 했었음. 대산공단의 대기오염과 악취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형편임. 지난 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초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3개사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9개사로 증가했음. 단위사업장도 계속되는 용량 증설로 덩치가 많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매년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그 결과 주민과 기업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갈등의 핵심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농도 규제가 있다고 생각함. 쉽게 말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개별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의 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만을 따지기 때문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렇게 믿고 있음. 하지만 굴뚝의 수가 너무 많아났기 때문에 오염원의 총량이 이제는 자연생태계 또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함. 농도 기준치에서 오염원 총량으로 이제는 관심을 돌려야 함. 대산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함.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대산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현황을 구축하고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함. 환경부가 정한 우리나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보면 서울, 순천, 여수, 경남 하동발전소 등 전국 7개 광역시·도 많은 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지만 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에는 단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음. 공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충남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도와 지사님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바람.

A1 걱정해 주신 말씀 꼭 명심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음.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음. 석탄화력발전과 발전분야, 수송분야 등에 대한 총량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음. 2011년도에 폴란드 EU연합을 방문했을 때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CO2 배출 그리고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비율, 트리플 세 가지 영역에서 20% 절감계획을 보고 우리도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 싶어서 2012년도에 우리 도의 에너지전략 중장기계획을 세운 바가 있음.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서 막상 실천을 해 보려고 보니 사실상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음. 그래서 지난해 재차 이 계획을 수정해 봤으며 현재 도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전략계획을 재차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림. 또한 미세먼지 및 아황산, 질산 산화물 등 8가지 요소에 대한 계측소를 올해 내로 25곳을 증설하여도 전체적인 대기환경 계측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금년 내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서산 석유화학단지 및 제철 그리고 발전 시설이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정함으로써 전체 총량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함.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환경부 고시가 함께 따라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힘을 써서 지정고시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림. 지금 현재 대기오염 문제는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임. 인터넷상에 매번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통합대기정보 있음. 통합대기정보에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기타물질로 나누어서 정보가 나오는데 충청남도가 최악의 지역은 아님.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이 정말로 나쁜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기를 바람.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여 도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겠음. 객관적인 수치를 우리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염된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음. 이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지역별 총량제의 관리 문제들도 지정을 받아서 풀고 또 중앙정부와 전략분야, 수송분야 그리고 각종 산업분야의 대기오염관리에 대한 업무 전반을 재정비해내야 될 전환기에 있음. 이 업무를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사례를 갖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림.



전낙운 의원

Q1 최근 문명사적대전환인 4차산업에 대해 1·2·3차산업혁명이 경제적인 부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냈다 하는 기대심리 및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42% 뺏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우리도가 할 일은 우선 규제를 혁파하는 것임. 드론 원격전로 시장 등 규제의 독소를 과감하게 풀어서 4차 산업 대열에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함. 월트디즈니라는 만화영화가가 62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를 세웠는데 그 영향으로 스티브잡스, 빌게이츠 등의 인텔이 탄생했음. 우리 충남이 4차 산업 교육 매카가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 학습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함. 4차 산업 학습 매카 개발의 적지는 공주와 논산의 경제선에 있는 계룡산 지역의 논산삼일이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포함해서 공주역도 살릴 수 있을 것임. 전국의 학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학습체험 매카장을 충남에 조성하는 것을 지사님의 정책 어젠다로 채택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A1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는 도시임. 정보통신에 기반해서 새로운 생산력과 문화자산을 갖고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교육장임.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장의 문제를 도시 전략으로 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습 집적 시설을 우리 도가 주도해 보자는 말씀. 그것도 설치하게 된다면 과거에 여러 가지로 연혁이 있는 논산지역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말씀. 꼭 기억하겠음.

Q2 서해안 가금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정부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이기에 지사님의 활약이 기대됨. 논산이 조화로운 논산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산자력이나 천수담에는 가물이 이미 심화단계에 접어들었으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람. 또한 쌀 과잉생산이 큰 문제인데 이 시기에 대체작물 재배지역을 구상해서 정책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금파해를 줄여야 될 것임.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답변바람.

A2 도비와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끌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타 직종 재배를 유도할 계획임

Q3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다섯 번 발생해서 3조 원 이상의 재정비용이 발생했으며 충남은 그중 세 번이 발생하여 약 4,500억 원 정도의 재정비용이 발생했을. 전국적으로 보면 구제역과 A로 안에서 농산물 소비 위축, 외식업소 침체 등까지 약 12~13조 손해가 발생하였을. 충남만 하더라도 재정소요 누계가 9,200억 원 정도 되므로 연관사업까지 다 합치면 2조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했을. 조류독감은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고 발생하고 있을. 상온 25℃ 이상에도 생존 가능한 변종으로 진화하였을. 이에 대한 도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A3 이번에 발생된 A와 역학 관련이 있었던 계통 소재 양계장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을. 농림부에서 6월말까지 백신을 연구하여 발표하겠다고 함.

Q4 대전지역에는 국립품질연구원 충남분원과 농협중앙회 산하 검사소, 대학연구소 등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도에는 천안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유일함. 학교급식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천안·아산·당진·홍성의 급식센터는 농축수산물을 골고루 330~424회 검사를 했을. 그에 반해 논산·공주·청양 급식센터는 시작하지 얼마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26~71회 정도의 검사밖에 안 했을. 충남의 검사소 위치를 표준해 보고 두세 곳 정도를 지목사업으로 추진해서 충남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가는 충남의 먹거리에 대한 인증을 좀 높였으면 좋겠음. 또한 이를 통해 학교급식, 로컬푸드, 현장체험, 6차산업 현장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 시설도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3농 혁신을 적극 뒷받침 해주시기 바람.

A4 예 그렇게 하겠음.

Q5 통상 판소리하면 사람들은 동편제와 서편제만 떠올리지만 판소리의 원조는 종고제과 강경이 발원지임.

종고제에서 동편제가 나오고 동편제에서 서편제가 나왔음. 서천·공주·홍성·서산에는 종고제 명인도 있고 제법 한 가닥 하고 있음. 하지만 여러 시·군에 산재해 있고 각 시·군이 증구난방으로 이중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에서 총괄하여 연구운역을 실시하고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향후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A5 사안에 따라서 도에서 챙겨야 될 것은 청기교 시·군에다 맡길 것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행히 종고제 같은 경우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종고제 맥 잇기 사업을 하고 있음.

Q6 계백과 오천결사대로 상징되는 황산벌은 백제가 멸망한 최후의 결전장이며, 그 결사대 5,000명이 그곳에서 전몰했음. 신라 김유신대군 5만 명이 네 번을 공격했지만 물리쳤음. 백제문화재를 연평균 18억 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황산벌은 출대하고 있음. 우리 문화가 공주·부여만 있는 게 아님. 주변 문화도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정부 예산도 끌어다가 제대로 된 층의의 뜻을 살렸으면 하는데 도의 입장을 답변바람.

A6 황산벌은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의 하나임. 도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음.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김원태 의원

Q1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 유엔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유엔 원칙을 보완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학대 등 노인의 인권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569건으로 전년도보다 4%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1,426건, 방임 984건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별로는 아들인 경우가 1,504건 38.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588건, 딸이 476건, 본인이 463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노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림.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함.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5년 동안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0년도에 1,835명에서 2015년도에는 3,159명으로 72% 증가했다고 할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부장 등이 달라지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체계가 불충분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 교육교재 개발 보급과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교육 등을 통해 학대 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둘째,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함.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5.4%로 절반을 넘었다고 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학대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에 대하여 노인학대 피해 정도는 학대피해 노인 5명 중 1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고,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등 잦은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학대피해 노인들은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이혼

것이 또한 현실임 심터 보호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람.

A1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각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은 소홀했다고 지적해 주신 어르신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도지사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림. 노인학대 예방활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밝은 데로 끌어내서 제도적 예방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함. 그런 점에서 도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2014년 인권선언 채택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활동을 강화해 왔음. 또한 연간 500~600회 정도의 현장지킴이단과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앞으로도 이 교육이 노인학대와 관련되어 좀 더 집중하고 특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음. 학대피해자와 관련되어서 현재 노인쉼터 한곳이 있음.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노인학대의 폭력피해를 보고 있는 어르신들이 쉼터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더 설치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시설로서 이용의 편의성을 더 높여야 되는지 한번 더 점검 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림. 현장 대응체계와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보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일선 복지정책의 활동 프로그램 내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음.

Q2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2012년 12만 7,260명에서 2017년도에는 6.1%가 감소된 11만 9,50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 경우 양극화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감소추세는 사회적문제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인 추세인 듯함.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내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면서 질감지원 배분방식은 선택과 집중투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 배분 및 투명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상해야 할 때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워 질문을 하는 것임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시나 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하고 싶어도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의 경우 찬성 60%를 50%로 하양하는 것과 4개 학년 이상 복식수업 학교에 대하여는 일방적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람

A2 2016년도에 2개 학교, 2017년도에 2개 학교를 통폐합하게 된. 향후 3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 더욱 관심 있게 접근해서 농촌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복식학급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사안임



김종필 의원

Q1 우리 충청남도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지원센터 3개소와 센터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 외국인의 고용관리와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제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외국 근로자로 인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없는 상황임. 외국인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잡았을 때 100만 명이면 월 1조 원, 연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충청남도도 충남교육청의 1년 예산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임. 요즘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100만 명에 달하여 우리 충남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전담 부서를 두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청년실업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청년계층의 잠재적노동기회를 축소시키고 박탈을 초래하여 자존감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물론,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양산하게 되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유유인력 증가로 지역과 국가의 총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을 크게 가져오고 있음. 청년실업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원적 문제점을 찾아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2019년 7월 기준 청년고용률이 42.4%이고 청년실업률은 9.4%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11%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국경제가 고공 없는 성장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는 등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인력수급 역시 불균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임금 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5.6%,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청년층 인구 중 니트족이 163만 3,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며 니트족 중 다수인 88%가 비활동 니트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속 시원하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된 청년 구직층과 노동수요 간 미스매치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청년실업 100만 명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이라는 사실에 접근하여 프래임, 몸을 다시 짜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계에 맞는 인력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해야만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임.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까지 크게 증가된 이후 80%대를 계속 유지하는 추세로서 대졸 청년의 공급과잉 속에 소수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무원, 국가출연기관과 대기업, 금융 등 사무관리직 연구개발 직만을 선호하여 일자리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으로 고용시장에 모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상당수의 청년층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어려운 사실임을 직시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미래의 청년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직업관을 확립하여야 하고 시장 노동수요에 맞는 학력과 역량 그리고 자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설계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임. 그 답을 독일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대학 진학률은 38%대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의 절반에 불과함. 독일은 중학교과정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검사를 통하여 사회 필요인력 공급체계에 맞는 진학진로를 유도해 줌으로써 대학까지 진학할 학생들과 사회현장으로 진출할 학생들을 좀 일찍이 구분하여 고교과정에 진화시키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기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미룬 채 등골 빠지게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지만 졸업 후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결혼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이제는 대학 나오는 것이 큰 짐이 되는 시대로 변해 있음. 일률적으로 80%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어갈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 이제 국민 모두가 이 현상을 직시하고 공론화하여야 할 것으로 4차 산업도 결국 소수의 리더 인력들이 주도할 것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활용하면 되는 것임. 이 사회는 사실상 5% 내외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각자 필요한 위치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임.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억지로 학생 모두를 리더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임. 학생 모두를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 현 교육시스템은 무모함. 따라서 이제 우리 교육을 크게 두 트랙으로 변경시켜 나가기에 한 트랙은 흔히 머리 좋은 학생 20~30%를 보다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시켜 국가와 세계를 선도할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트랙은 나머지 학생들을 각 사회에 맞는 직업교육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공부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미적분을 사교육비로 등골 휘어지며 입시용으로 가르치는 일은 이제 바뀌어야 할 대신이 학생들에게는 신나게 놀도록 하면서 인성을 잘 키워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고 한두 가지 기술이나 예체능 능력을 키워준다면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볼. 물론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학력 간 임금격차 문제 등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개선해 나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100만 청년실업과 100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A1

(1)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각각의 취업 형태가 국내의 청년들도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산업별, 서울 중심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사회적 조건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것으로 도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전락, 중소기업, 최저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논의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음.

(2)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일변도 국·영·수·사회·과학 중심이 아니라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전방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음. 그 일환으로 포항공대와 재단법인 여시재, 충남도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미래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림.



김 연 의원

Q1

현재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은 전부 379곳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96곳, 호남 62곳, 영남 96곳, 제주 62곳이며, 충청권은 63곳임. 이중 충남도에는 28곳의 박물관이 있음. 문화유산을 형용할만한 지역민의 수와 소장유물의 상관관계를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제주권 0.23, 영동권 0.15, 호남권 0.09, 충청권 0.06, 수도권 0.061, 영남권 0.05 수준임. 광역단체별로는 제주, 강원에 있어서 국립박물관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0.11 정도로 가장 많으며 충남도는 0.09로 비교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차임 공주와 부여지역 박물관에 고대 백제유물이 많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충남도내 박물관 28곳의 분포는 공주·부여에 7곳, 천안·아산·당진에 9곳, 보령·태안에 3곳, 홍성·예산에 3곳, 금산 2곳, 논산 1곳 등임. 소장유물을 보면 공주국립박물관이 5만 8,623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여 5만 8,100개 정도. 그 다음은 천안 무정박물관이 2만 6,000여 개를 소장하고 있음. 반면에 유물이 없는 곳도 두 곳이나 있음. 이런 유물을 소장하는 박물관의 현재 현황만으로는 우리가 문화유산의 보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특히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적 등의 실태라든지 보존이나 탐방, 가치 활용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충남 박물관의 현황을 보면 공주·부여, 천안·아산·당진 북부권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의외로 서산의 경우에는 보원사지출토유물 등이 많지만 대표할만한 박물관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미예산존불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 가야산의 출토유물·유적, 예산 가야사지, 보령 성주사지 등을 아우르는 가칭 '내포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답변바람.

A1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박물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술관도 함께 구상하고 있음.

Q2 작년 12월 20일 한 언론보도에서는 가야산 일원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대표적으로 서울 봉원사의 범종과 영암사의 범종, 그리고 보덕사의 석탑과 석등, 그리고 국보 제255호인 리움미술관의 요령, 고려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연경군의 석비 등이 모두 예산 덕산 가야사에서 반출된 유물들이라고 하였음. 이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징발당한 후에 해방 후에 적산 처리되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든지 중앙정부가 학술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대여해 갔다가 반납하지 않은 유물들, 그리고 매장 출토유물들을 원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또는 확인절차가 생각된 이런 상태로 중앙정부의 소유로 귀속된 유물들도 많이 있음. 또한 도굴이라든지 불법적 수단으로 취득해서 거래한 유물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수단으로 도내 소재지에서 반출당한 문화유산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이 분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분야이기때문에 충남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함. 최근에 수년간 국제사회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물의 '양도'라든지 '인수'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 아래 유통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제자리로 반환하라는 활동들이 많이 늘고 있음. 2016년에 프랑스는 캄보디아에

한투석상들을 반환했고, 미국은 인도에 청동조각상 유물 200여 점과 중국의 공룡화석 그리고 태국의 선사시대 유물들을 반환했음. 네덜란드 역시 천년불상들을 중국에 반환한 바 있음.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우리 도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와 전국적인 문화유산 회복 움직임을 주도하고 제반의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미 8개월 전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안한 바 있는 반출문화재 환수 실태조사단이 잘 꾸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A2 문화유산 회복을 위해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해외반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정황하게 환수운동을 벌일 수 있을. 아직 정확한 목표물을 정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단을 꾸리지 못했음.

Q3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산업 육성, 지속적인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산업의 신성장 활력 제고라는 4개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12개의 과제가 있음. 먼저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산업 육성에 15개 시군의 균형적인 문화지원 발굴,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 육성, 지역관계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 등 도모라는 과제가 있음. 두 번째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창업 지원, 단계별 창업지원 및 산업화 역량 강화 과제가 있음. 또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에는 문화산업 거점 인프라 유치와 조성, 창작과 향유의 원스톱 체계 구축 과제가 있음. 이러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음. 예를 들어서 여성경력단절자 지원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어떤 내용들을 접근해 보셨는지 답변바람.

A3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공예나 핸드메이드 등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잘 검토하여 중복투자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음.



정광섭 의원

Q1 충남도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월 1일 2시부터 공주보를 개방했는데 정부발표 이전에 도에서는 관계부처인 수자원공사와 공주보 방류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지 아니면 물 방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묻고 싶음.

A1 5월 30일 개최된 금강수계 담·보 연계 운영협의회에 충청남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상의했고, 도에서는 농업용수든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음. 이에 각 기관에서는 20cm는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얘기가 됐음.

Q2 보에서 20cm는 별거 아님. 그러나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면에서는 지형에 따라서 1km가 될 수도 있고 500m가 될 수도 있고 50m가 될 수도 있음. 지금 그 지면에서 물에 양수기를 놓고 전기를 연결해서 물을 푸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cm물을 방류해서 20cm가 낮아졌을 때 만약에 1km라든지 500m가 떨어져 있으면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또 호스를 내려서, 또 전기시설을 해서 물을 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임. 어려운 농민들 금전적으로 부담시키지 않았으면 함. 물론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녹조파해 예방도 맞지만 이 가뭄에 과연 공주보 물을 방류했어야 했는지 답달함.

A2 6월 1일 수위조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뭄이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감감을 하고 있음.

Q3 공주보 수문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고 이중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방지치를 위한 지방분권 그리고 협치와 소통을 노래 불러놓고 대통령이 됐다 해 가지고

말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지방지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됨. 지금 금강은 충남 유일의 젖줄이고 우리의 생명임. 만약에 금강이 없었다면 서천 보령, 홍성, 내포시 예산 일부, 당진 일부, 서산 태안 상수도 공급이 어려웠을 것임.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아꼈든 보냈기에 그나마 우리가 세수하고 밥 먹고 사는 것임. 금강물이 우리 충남지역에 차지하는 영향이 그렇게 큰데 물이라는 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함. 공주보에서 해당저수지 도수로 공사가 이번 7월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함. 지금 대산공단 공업용수 부족하다고 난리이며, 서산·태안 간척지 가뭄피해는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임. 7월에 공주보에서 해당저수지로 물을 보내면 해당저수지에서는 수문만 열면 삼고호로 바로 흘러들어감. 그러면 삼고호에서 당진 대호지호, 대산공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물을 그렇게 합부로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것임. 태안은 물이 없어서 못자리도 못한 곳이 있지만 못자리에 물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모를 심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못자리를 안한 곳도 있음. 아마 열을 안 가서 간척지에는 벼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주보의 물을 우리가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급히 수문 개방한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음.

A3 6개 기관이 참여해서 협의체로 운영을 추후 1년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의견을 내도록 하겠음. 삼고호, 대호지, 아산호 연계사업을 통한 수자원 활용은 충남도에서도 제안하는 사업임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4 AB지구를 해당저수지에서 도서관로를 통해서 홍성 읍내 지나 바로 구항면 경계까지 물을 떨어뜨려 주면 A지구까지 물이 자동으로 흘러들어감. A지구 간월호까지 이렇게 물을 보내면 간월호에서 다시 B지구로 물을 보낼 수 있음. 이 사업구간은 몇km에 불과한 거리로 태안 남면·안면읍 일부까지 얼마든지 물 공급이 가능함. 금강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제일 필요한 서부권 쪽 서산·태안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함.

A4 지금 도에서 구상중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말씀하신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해당 중앙부처와 상의도 하고 요구도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음.

Q5 태안군에서 군의원 합 때에 강릉실내수영장으로 건학을 간 적이 있었음. 수영장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깔아 봤었음. 처음 설계부터 태양열을 놓으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주 물을 잘 데워쓰고

있었을 초기 시설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전기로 데우거나 기름을 사용하지는 않아 환경에 좋을 것임 본 의원도 태양열 온수기를 25년 써 봤음, 3월부터 11월까지 보일러를 안 켜도 온수만 틀면 한나절에는 뜨겁고 야간에는 미지근한 물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 데워 쓰는 것은 기름 값이 그만큼 절약되는 것임 자열도 여름철 같은 경우 찬물이 나오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 히트펌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열도 관철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한번 검토해보기바람

A5 수영장 물을 데우는 방법으로는 태양열이나 자열은 어렵다고 할 전동 및 부수적인 부분의 전력용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Q6 수영장을 굳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시군에 위임을 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1개의 시군 학교 내에 작은 수영장을 따로 만들어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A6 의견 주셔서 감사함.



이공휘 의원

Q1 중앙정부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정 및 교육행정 성과 보고는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어 좀 늦은 감이 있음, 성과계획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의거 예산안 첨부 서류로 도의회에 제출됨.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적의 달성여부, 초과달성·미달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서류로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결산서에 포함하여 도의회에 제출됨 충청남도 본청의 성과보고서는 21개의 전략목표, 135개의 정책사업, 246개의 성과지표로 되어 있음,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36개 달성 180개 미달성 30개로 되어 있음, 전체 246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명방법을 적용하면 투자지표 50개 과정지표 52개 산출지표 142개, 결과지표 2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임 이것은 정책사업의 목적이 사업완료 후 1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수치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특히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가 35개로 1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조사주체, 조사대상, 조사문항, 조사시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 다음으로 도청 각 실과별 성과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실국명은 2016년 기준인 홍보협력관실은 두 가지 성과지표가 도정홍보에 대해 대표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산출지표로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지표로 표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기획조정실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행정의 품질 제고로 도민만족의 증진 성과목표 달성률은 87%로 미달성으로 보고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본 바로는 114% 달성하였으니 확인해 보기 바람, 재난안전실은 9개 성과목표 모두를 달성하였지만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확립은 조래 제정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 정책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함, 경제산업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측정산출을 포함하고 결과지표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측정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럼을 통한 자료수집에 의존하고 있음,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는 외자유치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는데 MOU 체결 현황을 달성 결과로 제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자치행정국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와 객관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임, 문화체육관광국은 지역계 예술 활동,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확대의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95%에서 80%로 축소하여 성과보고를 하였고, 문화재 보수 대상 사업에 대해 계획을 축소하여 보고하였음, 이는 변경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의 성과지표로 도심 속의 150개 학교 논 만들기, ICT 융복합 시설 확대를 통한 노동력 10% 절감, 안산 비가림 재해설비 40동 지원 등 세가지로 정하였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 가지 성과지표 달성이 진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되는지 논리적인 고민이 필요할, 보건복지국도 충남 보훈공원 준공계획 변경은 의회 보고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환경복지국은 16개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달성이라고 표시하였으나, 만족도는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것이고 달성도 측정산식에서 분모인 목표 건수가 유동적인 값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대입하면 달성률 100%가 나오는 것임. 초과달성 및 미달성은 원인분석을 의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야 되지만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범위에 있는 사업은 원인분석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지 걱정스러움. 건설교통국의 도내 접근시간 30분 단축 달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지표임.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할 것임. 성과계획서 상에 포함되었던 측정산식에 대한 설명과 분모가 되는 값은 유동적인 값이 아닌 정형화된 객관적인 값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해양수산국은 연안, 도서 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한 달성률을 수정해야 할 것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을 60%, 목표 대비 15% 결과를 100%로 성과보고하고 도서중합개발 추진율 77%는 10%만 추진하고 142%로 초과달성으로 보고한 것은 수정하기 바람. 소방본부의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사업을 초과달성으로 보고하지 않고 달성으로 남겨둔 점, 교육훈련만족도 향상의 설문지 점수 배점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건수에서 등급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충청남도교육청은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정책사업, 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12개, 달성 46개, 미달성 10개였음.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정을 적용하여 분석해보면 투자지표 8건, 과정지표 2건, 산출지표 58건, 결과지표 0건으로 분류될 수 있음. 도교육청도 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산출지표의 비중이 85.3%로 앞으로의 결과지표로는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변경해야 할 것임.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의 정책사업에서 교원의 연수 참여와 학생의 수련활동 참여, 동아리의 운영 개수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지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동아리에 가입해야만 인성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연계성을 고민해

주길 바람. 기초화력발전, 도정시스템 활용 학생 참여율 사업은 명확한 분모값과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우리 도정에 대한 246개 도정지표, 68개 도교육청지표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인 지표 설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지표로 설정되어 의회와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해설이 될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지표와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의견을 답변바람.

A1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되었음. 앞으로 도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별로 작성된 성과계획보고서 안들이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토록 하겠음.

(2) 도교육청도 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음.



김용필 의원

Q1 내포신도시 건설을 이야기할 때마다 친환경 자주, 자급 그리고 송전선로부터 쓰레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자동화시설의 첨단도시를 이야기해 왔음.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 특히 SRF가 전체 중에서 22% 안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임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내포 주민 여러분들과 논의자리 가구를 만들어서 현재 내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열병합발전소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2 지난 5월 11일 SRF 열병합발전 주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도에서 공청회를 준비했었음. 물론 그 공청회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끝날 때 주민들의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격앙되어 있었음. 이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A2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중앙 열공급 방식을 하기로 결정했음. 그것에 따라서 열공급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산업부 승인이 2010년 8월에 났음. 지난 5년 동안 그 원료와 원료의 환경성평가를 통해서 2015년도에 평가가 났음. 이 과정을 내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Q3 정말 SRF 열병합발전소가 중앙기관들의 이야기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주민들이 바라는데 왜 우리하고 가까운 세종시에는 열병합발전이 하나도 없을. 현재 세종시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밀려나는 추세로 알고 있음. 세종시에서 지어진 신도시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임. 앞으로 SRF라는 폐플라스틱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적인 환경 추세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3 도지사는 어떠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굴뚝에 대기오염 기준치 이상의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관리해 왔고 이 중앙난방 공급장치 연료 문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도가 보장하겠음. 그러나 LNG로 전환했을 때의 비용은 주민들이 책임져야 될 비용임. 그래서 주민들과 열 공급 회사들 간의 좀 더 좋은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음.

Q6 3농 혁신 같은 경우는 지사님 민선 5·6기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임. 우리 충남이 전국 4위의 농업도이고 3농 혁신 총 사업예산은 1조 6,700억 원임. 이중 도비가 2,300억 원이

들어가서 약 13.8%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예산 증감률을 보면 2017년도에 도비는 줄고 시·군비는 증가한 것이 자료 분석에 나오고 있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국비예산에 있어서 국비예산은 계속 45%가 늘어났으며 도·시·군비는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음. 특이한 것은 2017년도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도비는 줄고 시·군비는 계속 늘어났음. 3농 혁신 소관 부서의 점유율을 보면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가 각각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이 내륙에 있는 도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곳인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있어 아쉬움. 앞으로 균형적인 시각으로 아제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임.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A6 수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 지원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음.

Q7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마을을 관통하고 농경지를 지나고 중요한 것은 백제시대 때 항교와 임존성 지역을 지나게 되어 있음. 그래서 도문화재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부결되었음. 이것은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사업자가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에 스마트휴게소를 만들어 기업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A7 지역주민 정주여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훼손방지 그리고 생태와 자연가치에 대한 보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과 논의하고 투자회사들과 이 노선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음.

Q8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곳이 바로 내포지역이며 덕산의 시장 초등학교를 다니셨음. 내포지역에는 수목사를 비롯해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있음.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제3대국이라고 불리는 가야에 대한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함. 가야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합천 고령 가야산, 전남 순천지역 가야산, 충남 예산지역 가야산이 있음. 정부가 호남지역의 가야산과 영남지역의 가야산을 개발하고 보전할 것이 아니라 최초의 가야 문화 유적지인 우리지역의 가야산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봄. 이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A8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가야산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7. 5. 11. ①]

빚통교실 해결 위한 매뉴얼 마련 촉구

매년 전기요금 지출 늘고 있지만, 학교 기본운영비 인상 인색
교육용전기요금 체계 개편됐지만, 부담 해소 여전히 부족

해마다 각종 언론에서 '매년 반복되는 빚통교실'을 해도 지면되나, 빚통교실 이제 그만' 등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과 일선학교에서는 예산부족, 전기요금 절감 등을 이유로 빚통교실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천안 동·읍 지역 초·중·고등학교 기본운영비 인상 현황을 보면, 26학급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억 1,400만원, 2017년은 2.5% 증가한 2억 1,900만원, 중학교의 경우 2016년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억 1,700만원, 2017년은 2.5% 증가한 2억 2,300만원으로 나타났고, 34학급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16년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억 2,000만원, 2017년은 1.5% 증가한 2억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 천안 동·읍 지역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16학년도는 2015학년도 53억 400백만원 대비 3.6%인 1억 8,900만원 증가한 54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안 지역 학교만 보더라도 기본운영비 인상은 2016년은 초·중·고등학교 2%,

2017년은 초·중학교 2.5%, 고등학교 1.5% 인상되었으나, 전기요금 지출 현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016학년도에 3.6%가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보면 올해도 최소한 지난해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매년 반복되는 빚통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특정일의 피크 전력을 적용하던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감침월 피크전력을 적용하도록 개편했지만, 전기요금 부담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빚통교실은 물론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제언하고자 한다. 일선학교의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고려하여 학교운영비를 책정하여 줄 것과, 빚통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빚통교실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송덕빈 의원 본회의 2017. 5. 11. ②]

이륜차 도난 방지 시스템 지원 해야

최근 5년간 이륜차 절도 총 3456대...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적지 않아
검거 건수 916건으로 검거율 27.3%에 머물러...대부분 청소년 호기심

2015년 1월 7일 아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15대(시중 가격 1,500만원 상당)를 상습 절도한 10대 12명을 검거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최근 우연히 집 정리 중 발견해서 읽어 보았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내 오토바이 현황을 살펴보니, 천안 21,222대, 서산 11,934대, 태안 5,601대, 아산 11,404대, 논산 5,728대, 거창 177대, 공주 10,764대, 보령 6,560대, 당진 9,635대, 홍성 8,987대, 예산 8,289대, 부여 7,539대, 서천 5,637대, 금산 6,981대, 청양 4,355대, 총 124,813대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충남 절도발생률 보면 최근 5년간 3,456대 중 검거 916건 검거율은 27.3%로 전국 16개 경찰청 중 오토바이 절도 검거율 12위로 저조한 현실이며, 절도 연령대를 보면 20대 미만 청소년들의

호기심 및 이동수단으로 절도를 하였으며, 피해자 분석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이동수단과 영세상인 음식점 등 배달수단이었으며 사회적 약자인 주부, 저소득층 등의 이동수단이었다. 이 중 심각한 점은 절도범 중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 알고해야 할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당진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도난방지시스템 비콘"을 도내 전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전 예방과 커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뜻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연 의원 본회의 2017. 5. 19. ①]

중부물류센터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새정부 들어 4차산업혁명 중심지 노리는 지자체 경쟁 시작...전략 산업 빠르게 움직여
미래기술융합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 천안 중부물류센터 유치해야...선제적 대응 촉구

최근 각 지자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조직을 꾸리거나 산·학·연 협력으로 관련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역의 전략 산업에 도입하려 한다. 하지만 지역의 핵심발전 방향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장치들로 지역별 캐릭터만 다른 유사한 체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디자인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집적지가 된 충남북부지역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과 관련된 '미래기술융합센터'와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장비관리, 무선자율주행 제어기술 등을 위한 공동 시험장 구축사업인 '미래기술 Test-Bed' 조성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시험인증센터가 건립 예정인 천안지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산하의 축산자원개발부 즉 성환의 종축장이 이전되면 그곳에 미래 기술융합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종축장 이전에 대한 검토 영역이 나오고 그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고 이전하기까지는 최소 3~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종축장 이전부지의 활용은 시기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종축장 이전부지보다는 현재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중부물류센터의 활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부물류센터의 활용방안을 문화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 지정 되어있고 인근의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하여 기업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또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중부물류센터에 문화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적 환경 특성을 살리지 못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충남도는 빠른 결정력으로 중부물류센터의 활용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하며 우리 충남도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낙운 의원 본회의 2017. 5. 19. ②]

육군 훈련소 주변 도로 확장 시급

훈련소 입소와 면회 시장병과 가족몰리면서 교통 체증 유발...주민생활불편 가중
연간 130만명 몰리면서 국도 1호선 입소대로부터는 난산 IC까지 3km 구간 정체 심각

단일부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논산 육군훈련소는 1951년 11월 도 경계선상에 있던 논산군 구자곡리와 익산군 황회리의 2개면 위에 세워졌으며, 4주 또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배움림과 동시에 새로운 병력이 충원되는 시스템으로 연중 1만5천여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1963년 훈련소 별칭인 '연무대'를 따라 '연무읍'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장차 인근 주민들은 훈련소로 인한 보상이나 보은보다는 61년간 총소리와 박격포탄과 수류탄의 폭발음을 들으며 고통을 겪어왔다. 우선 훈련소와 연결된 ①호 국도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이어지는 68 국지도를 보면 훈련소에 매주 3~4회에 걸쳐 입영을 하고 수료를 하며 면회도 하지만 그때마다 지역주민과 ①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은 지독한 교통체증을 겪어왔다. 반대로 차선은 차량 한 대도 지나지 않는데 2Km 구간이

주차장 되어 30여분 이상 지체하거나 3~5km를 우회해야 벗어날 수 있다. 우회도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연결된 68 국지도와 관련해서는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 이래 47년 동안 차량만 122만대에 2200만대 시대를 구가하고 있을 뿐 저 도로가 개선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3Km 구간에 군민 생활시설, 제조공장 마을은 즐비한데 차량 회전 가능한 구간은 단 한곳도 없을뿐더러 농기계 이동로, 읍내 시장과 병원을 오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도로, 인도 등은 폭증하는 차량에 위험을 느끼며 도로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시설물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분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반성을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다.



[정광섭 의원 본회의 2017. 5. 19. ③]

서해안 대규모 간척지 염분 농도 상승 ‘몸살’

장기간 가뭄으로 조성된 담수호 염도 정상치 2~12배 수준 치솟아...농업용수 사용 불가
강수량 133.7mm로, 지난해 279.4mm의 절반도 못미쳐...예비비 투입 등 대응책 모색해야

현재 도내 강수량은 133.7mm로 작년 279.4mm, 평년 282m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7.8%로 평년의 67% 수준이다. 계속기 설치된 저수지의 시·군별 저수율을 보면 예산 40.6%를 비롯해 보령, 서산, 태안, 홍성, 아산, 청양은 50%대, 천안, 공주, 당진은 60%대, 부여, 서천, 논산, 금산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100년 만에 찾아 온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이러한 시기를 지내면서 극복했지만 올해 봄 가뭄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지금 가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간척지가 많은 태안·서산·보령·서천이다. 이미 제지역구인 안면도는 저수지가 마르지 오래 되어 모내기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수지에 물이 조금 있다고 해도 염도가 4,000~5,000ppm으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해마다 염해 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서산시에 있는 부남호 염도가 하단은 5,000ppm, 중간 상단 양수장은 4,460ppm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없이 염도 4,460ppm의 물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남호의 물로 모내기를

한 논은 모는 이미 노렇게 죽어가고 있다. 비만 시원하게 100mm 이상 온다면 다 해결 되겠지만 이미 태안군은 예비비 17억을 풀어 8개 읍·면에 관정 즉 지하수를 파기로 했다. 일부 태안 시·도에서도 시급히 관정을 개발하고 기업체의 농업용수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루빨리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비비 사용 결정이 쉽지 않은 것지만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제 앞에 모를 심지 못하다 보니 모가 너무 웃자라 썩어 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또 비가 온다고 해도 모가 없어 모내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각 시·군의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되는 시·군에는 예비 모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피해 지역 시·군에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7. 5. 19. ④]

서부내륙고속도로 원안대로 준공해야

당초 원안과 다르게 계획안 변경되면서 자연 경관 훼손 및 생활권 단절 우려
대흥면 슬로시티 두 동강 위기...슬로시티에 고속도로 건설 대한민국이 유일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담을 목적으로 평택~부여~익산 간 총 138.3킬로미터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 협약안 의결에 따라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초 원안은 아산시 도고면을 통과해 예산군 대술면과 신양면을 지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홍성까지 내려와서 예당저수지 정상을 거쳐 다시 청양 부리로 올라가는 노선이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보니 빼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2009년 국제슬로시티연명으로부터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대흥면이 완전 두동강이 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 실제로 이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면 대흥면의 예당저수지와 봉수산 휴양림 수목원 등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며, 옛 서포가 근무하던 동천과 향교, 그리고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행진지인 임존성은 그야말로 그 형태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슬로시티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그럼 왜 인자 사업자는

고속도로의 본 기능을 왜곡시키며 예당저수지 주변과 봉수산 임존성을 고집 할까? 사업자는 예산군 발전과 농산물 판로인정을 위해 멋진 휴게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산군도 처음에 그 말에 현혹 되었으나 지금은 뒤늦게 전체 주민들의 반대와 부딪혀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인자 사업자는 고속도로 전체 평지 노선 가운데 봉수산만한 경치를 가진 곳이 없기에 이곳에 숙박시설만 세워둔 최고의 휴게소를 만들어 고속도로 심장부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속셈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대덕군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대덕의 후손으로서 1400년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들께서 온 몸을 던지고 살신성인의 길을 걷고 있는 남들의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찾는 최초 원안대로 가고 그것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삶을 더 이상 짓밟고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충남도가 온 힘을 다해 막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



[이공휘 의원 본회의 2017. 6. 1. ①]

4차산업혁명...인재육성 데이터 방향성 주문

“기술에서 시작하지 말고 사람에서 시작하라”

지역적 특화전략 없이 단기적 성과 몰두시 예산 낭비 또는 정책 오류 범할수 있어

본 의원은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로서 지난 3월 첫 모임 이후 지금까지 고민했던 충남의 미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 연구모임은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내 육체 병문과 현황과 경제유발효과분석, 천안·아산 상권분석, 천안·아산 지인점검 등에 대해 데이터 기반 지역진단을 통해 정책 리스크감소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프레임 적용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도정에 접목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혁명을 근간으로 했던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의 융합과 연결이 중심이 되는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공간정보는 물리적 객체와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을 복사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7년 한 해에만 722개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7년 국가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은 공공기관에서 현재진행형이고 공간정보 분야에 큰 기회임이 분명하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지역성에 부합한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유사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낭비 및 정책오류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능사회로 가는 거대한 기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인재육성과 지역성을 뚜렷하게 규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한 시정임을 강조하고 싶다. 자칫 기술만을 따라가다 사람이 배제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공유할 대상도 사람이고 사람이 있어야 최첨단 기술도 소용이 되고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사람이 중심인 충남 도민이 행복한 충남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김석곤 의원 본회의 2017. 6. 1. ②]

숲과 강 체험수련장 건립 제안

도내 해양수련활동 위한 수련장 있지만, 숲과 강에 대한 수련 시설 전무
금산 비단골체험학습장 신축 통해 학생에게 힐링과 감성, 정서함양 도와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도 혁신에 있어 선생님 수업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성을 가꿀 수 있는 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존경하는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3년 태안에서 벌어진 공주사태부터 해안대 랑프 사태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다에서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숲과 강에서의 체험교육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교육은 열대수련장이 담당하고 있지만, 강과 숲 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없다. 우리 도내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 많지만, 특히 금산은 학생들이 감성교육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미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부리면에 위치한 비단골 체험학습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설은 열악하다. 건물은 낡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금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충남지역 전체학생들을 위한 수련시설의 신축을 제안한다. 수련시설이 갖춰진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생태태생사 등 전문가와 함께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에서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금강 본류에서 강 체험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강 속 생태계를 관찰하고, 다슬기 집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셋째, 금산은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인해 전체관속 학습이 용이하다. 전체관속 학습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우주탐험의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의 세계적인 우주비행사가 우리지역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비단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금산군에 숲과 강을 체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



[홍재표 의원 본회의 2017. 6. 1. ③]

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 시행 촉구

석탄화력발전소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대기오염시설 준비...도민건강 위협
서울 등 수도권 2008년부터 시행...도민 건강과 권익 뒤흔들 등 안일한 행정 질타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업무지시 3호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이었다. 충청남도의 대기 질 개선 비전은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함께 누리는 행복한 충남”이다. 본 의원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대책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중 느낀 바는, 도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주민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일원은 이미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5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우리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진 현대제철, 서산석유화학단지 등을 비롯한 대형 대기오염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충남 서산과 태안 그리고 당진지역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대책이란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충남도와 지자체는 발전소를 비롯한 기업 단지 보기에 급급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초미세먼지의 최소 50% 이상이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충남도는 2015년 시간당 초미세먼지(PM2.5)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국 1위를 기록했다.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2060년 대기오염 조기사망률 1위가 우리나라다. 허버트와 그린피스는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여명, 계획 중인 발전소 운영이 시작되는 2021년에는 2,800여명이 조기사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지자체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전소와 대형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민건강검진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형식적인 행정행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하루빨리 도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와 “주민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장기승 의원 본회의 2017. 6. 16. ①]

“충남교육청 정문 없어” 안전사고 위험 증가

도교육청 정문 진·출입로 없어,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출입로 우회 이용
각종 연수 시 차량 통행량 500대까지 증가... 교통사고 위험, 민원인 불편 가중

내포신도시 이전 5년차를 맞이하는 충남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정문 진·출입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상존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두 개의 기관이 단일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차량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곳은 교육연구정보원 정문으로 통하는 출입로 한 곳으로, 충남교육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회할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충남교육청은 정문이 없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면서 교육연구정보원을 충남교육청으로 오인하여 방문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충남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은 평상 시 차량대수가 300여 대로, 각종 연수와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500여 대까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교육연구정보원 한 곳으로, 많은 혼잡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출입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쪽 방향에 진·출입로 추가

개설 협조를 충남도에 의뢰하였으나, 충남도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차량의 가·감속 차로 및 타이퍼의 최소길이 150m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출입 개설 불가를 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충남교육청 남쪽에 있는 연못 주변 조정시설을 도로로 변경하여 출입로를 추가 개설한다면 도로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청사 접근성 향상과 통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서해안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단체의 유치와 인구의 유입이 필요하지만, 각종 기관들을 찾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쪼록, 충남도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내포신도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건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로 출입로 추가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정희 의원 본회의 2017. 6. 16. ㉔]

“충남도민 제1군 감염병 사각지대”

20% 가량 개별식수원 식수 공급...물 또는 식품 매개로 한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 노출
메르스 사태 2년 지났지만, 여전히 음압격리병상 등 고위험군 감염병 대응 체계 제자리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충청남도에서도 1882명을 격리되었고, 그 중 확진자는 12명이었으며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 현재도 단국대학병원에 7병실, 공주의료원 6병실, 모두 13병실의 음압격리병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메르스가 또 다시 창궐한다면, 우리 도는 불과 13명만 격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또한 여름철은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군 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6종의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먹는 물에 대하여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1군 감염병의 창궐은 막을 길이 없다.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90%라고 하지만 시·군별로 대략 20% 이상의 차이가 상수도가 아닌 개별 식수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 식수원은 3년에 1회의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질검사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또한 26만 7천원이 소요될 정도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48개에 달하는 수질검사 항목은 도민을 수인성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기준 조치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별 식수원으로부터 도민들에게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도는 감염병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식품을 매개로 한 제1군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대책도 함께 걱정해야 한다. 요양시설을 비롯한 집단 급식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식품으로 인한 제1군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별히 학교급식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시스템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도에서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연 의원 본회의 2017. 6. 16. ㉔]

도 인권조례...“성소수자 편견 발목잡혀선 안 돼”

일부 종교단체 인권조례 폐지 청구민원 제기...인권위조례 폐지 바람직하지 않아
성평등·다양성 전 세계 화두...정신병, 에이즈 등 차별과 폭력 멈춰야

최근 일부 기독교단체가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했다. 이유는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권조례가 AIDS 확산과 성별정체성의 혼란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종교적 입장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사실의 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하여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즉 여성인데 남성을 좋아하지 않고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옹호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마치 범죄 행위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조례 폐지

청구인들은 성적지향이 동성인 사람, 즉 동성애자들이 AIDS를 확산한다고 주장한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주된 전파경로는 성 접촉, 오염된 주사기 사용, 혈액이나 혈액제 투여 등이다. HIV의 감염 경로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성 접촉이다. 이 같은 HIV 보균자의 무분별한 성 접촉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이지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가 HIV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는 18%이고 나머지 82%는 이성애자인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와 오해가 결국은 편견을 낳는다. 그리고 그 편견으로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충남의 인권조례가 발목을 잡혀 시급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등의 인권행정이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이다. 고민과 성찰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

| 현장의정 |

▶ 행정자치위원회(5.16.)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현장 방문

-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협업 통한 창업 생태계 육성 당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찾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 점검



▶ 농업경제환경위원회(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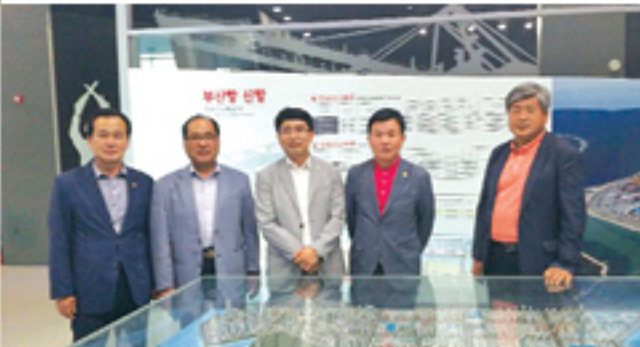
산수저수지 찾아 영농철 가뭄 대책 점검

- 보령댐 저수율 11.8%, 가뭄 경계 단계 유지...생활·공급 용수 공급 차질
- 저수율 8.6%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제한급수 불가피...물 사용 매뉴얼 마련 주문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6.12.)

부산신항만과 한국해양대학교 찾아 충남형 해양항만정책 모색

-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항만 현황해 핵심항으로 구축해야
- 해양생태·신산업·레저관광 분야 등 새로운 산업 분야 확대 진출...미래 성장 동력 창출



▶ 교육위원회(6.12.)

신설학교 및 개교예정교 현장방문

- 도내 신설학교인 아산 신리초와 천안 노석초 찾아 공사 진행 상황 점검
- 교육환경 및 시설 점검...개교 계획에 차질 없도록 당부

의회운영
위원회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난을 극복해 처
극복한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널리 퍼지는 6월이 되기를 바라며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했다.



김종문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응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지상 의원



이공휘 의원



이용호 의원



정광섭 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자위, 현행 결산 시스템 문제점 지적

- 자치행정국 소관, 보조금 집행 정산 미반영 실태 추궁...집행부 노력 부족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지지행정국 소관 2016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 정산 미반영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필 의원은 “각종 보조사업 중 특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세입세를 결산서 상에는 잔액이 없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실제 집행액은 남아있다”며 현행 결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결산서 첨부지료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의원은 “당진·평택항도계 분쟁 관련해서 도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정책특위를 구성,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의 핵심시책으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언적 성격의 추진시책만 있고 실행력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꼼꼼하게 따져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공휘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의 기업체 정보나 데이터 축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지적하면서 “확실한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산출하는 형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치분야를 집적화 하지 않고 3군데로 분산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



신재원 의원



김석곤 의원



유익환 의원



김종문 의원



이종화 의원



이공휘 의원

문화복지
위원회

충남도의회 문복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

매년 반복되는 이월 행태 지적 및 불용액 최소화 당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9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고·영시 이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을 통해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상 부위원장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사업인 도립도서관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 예산의 81.9%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다”며 “공사기간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시정요령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지방 체육활동시설사업 지원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한액 대비 87%, 충남관광홍보물 및 영상물제작 공공운영비는 예산한액 대비 8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의원은 “문화유적관광자원화 지원 등 11건에 대한 61억 1509만원이 국비 미고부 등의 이유로 사고 이월됐다”며 “사전 절차 이행기간이나 공정률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길형 의원은 “일부 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상황 등 관리가 미흡하다”며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체육 회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통합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비지원 통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이기철 의원



김홍열 의원



조길형 의원



김 언 의원



김원태 의원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산수저수지 찾아 영농철 가뭄 대책 점검

- 보령댐 저수율 11.8%, 가뭄 경계 단계 유지...생활·공업 용수 공급 차질
- 저수율 8.6%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제한급수 불가파...물 사용 매뉴얼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6일 서산시 해미면 산수저수지를 찾아 영농철을 대비한 가뭄 대책을 점검했다.

농경환위에 따르면 도내 서북부권 수자원 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11.8%로, 가뭄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년 저수율이 25.9%인 점을 고려할 때 모내기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농경환위 위원들은 당장 저수율이 8.6%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제한급수 등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효과적인 물 사용 매뉴얼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용일 위원장은 "100년 만의 가뭄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양수저류 등 선행적 용수 확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선 의원은 "충남도내 229개소 저수지에 대한 단계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근심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문규 의원은 "모내기를 앞두고 물이 가득 차올라야 할 물녘이 바짝 말라 있다"며 "가뭄에 선제적 대응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재충전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영농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관계자는 "서부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비, 용수원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일부 저수지에 양수저류 설치 공사를 마무리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골자로 한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



김문규 의원



송명빈 의원



유병국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규 의원



홍재표 의원

안전건설 해양소방 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해소위, 충남형 해양항만정책 모색

-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항만 환황해 핵심항으로 구축해야
- 해양생태·신산업·레저관광 분야 등 새로운 산업 분야 확대 진출...미래 성장 동력 창출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6월 12일과 6월 13일 양일간 부산신항만과 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아 선진 항만 인프라 구축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충남형 해양항만정책 추진과 국립해양수산물대학 유치 모색을 위해 항후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으로서의 부산신항만의 역할과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해양건도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안전해소위 위원들은 부산신항만에서 접안시설,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과정 안전보안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충남의 항만을 환황해 시대 핵심항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전체에 없는 대신항과 중국 웅안항의 카페티 취항 문제도 빠른 시일 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맹정호 위원장은 “국가 해양항만정책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라며 “충남이 국책기관 및 연구기관·대학 등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해양생태·신산업·레저관광 분야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확대 진출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보령신항 1단계 사업(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과 대신항 다목적 부두 공사, 장항항 호안정비 및 항로준설 등 항만별 기반시설 확충, 시설물 보수·보강이 진행 중이다.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



조이환 의원



홍성현 의원



유천종 의원



전낙은 의원

교육
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당해연도 집행원칙 지켜야

-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9일 열린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당해연도 집행 원칙의 준수 및 이월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 주문했다.

박낙구 의원은 "많은 학교 시설사업비 등이 공기 부족, 방학 중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아월 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비 또한 긴급한 사유로 편성한 예산 이월 하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꼭 필요한 경비 만 계상하고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정리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필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된 40억 가운데 31억(77%)이 명시아월 됐다"며, "유해성 논란으로 운동장 사용에 학생 및 도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하여 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형달 의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이월 및 불용액이 총예산 36억 2,800만원 대비 11억(30.7%)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인철 의원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읍·면 지역 학생에게만 편중 지원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동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동·읍·면별 학생 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



이진환 의원



김용필 의원



박낙구 의원



서형달 의원



오배근 의원



오인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 승인

-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금 정산 사항 등 반영되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과 6월 15일 양일간 열린 제296회 정례회 결산 심의에서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서형달 예결특위위원장은 “도의 경우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김종필 의원이 지적한 보조금 정산 누락된 부분이 올해 결산 시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내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시스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중앙에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도교육청 심의에서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액 감소 등은 지난해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이월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정부추경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있으나,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 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산엑스포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박차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위, 7일 엑스포 준비 및 추진상황 점검
- 인삼 종주국으로서 한국 위상 재정립 계기 마련 주문...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충남도의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6월 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4개 실·국·원·본부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홍보마케팅·관광·국제협력·전시연출·현장운영 등 분야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려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삼 수출의 확대와 인삼종사자 역량결집 등을 통해 인삼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석곤 위원장은 "재난, 소방, 제품 안전성 검사, 홍보 계획 등을 치밀하게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박낙구 의원은 "입장권에 대해 현황 및 타시도와의 협조요청관계 등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덕민 의원은 "인삼엑스포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복지보건국 역할이 중요하단데 식중독, 방역점검에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복만 의원은 "금산은 인삼생산량이 전국의 8%, 충남의 20%이지만, 전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인삼이 금산으로 모인다"며 "금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태 의원은 "한국인삼공사의 지분을 보면 외국인 보유 현황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관장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성격이 강하다. 금산인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문 의원은 "주차, 화장실 문제 등 지난번 행사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다.

한편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금산군 인삼엑스포광장에서 개최된다.

의원주장



서형달 의원
[5. 31]

충청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 큰 폭 증가”

- 도내 사립학교 총 83개교...2016년 전년 대비 3억원(10.9%) 납부액 증가

충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충청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에 따르면 도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립학교는 총 83개교(법인 54곳)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사립학교 등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형달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특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의 시설지원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그 결과, 사립학교 등의 법정부담금납부액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차등 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납부를 항상 5개년 계획,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우 의장
[6. 1]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장항선복선전철 조속한 추진 주문

-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장항선 공약 발표...충남 철도 불모지 오명 벗을 기회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장항선복선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발 빠른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장항선 복선전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만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의장은 6월 1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장항선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한 충청권 철도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의장은 “장항선은 수도권과 충남 서북부 그리고 전북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유일의 대량수송 수단 이 될 것”이라며 “서해선복선전철과 연계되면 그 기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며, 서산 민항 취항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비용편익분석(B/C)이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해 예타 통과 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만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남도는 철도 불모지라는 오명을 썼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와 함께 KTX 공주역 활성화와 장항선복선전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우 의장
[6. 1]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공주보 개방, 현재 가뭄에 역효과”

- 평균 누적 강수량 161mm, 평년의 56% 수준...대부분 도내 저수율 30~40%에 머물러
- 영농철 모내기 차질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제 수상공연, 수상스포츠 경기 등에도 차질 불가피

정부가공주보를 포함한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과 조길행 의원(공주2) 등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뭄 등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의 경우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데다, 백제문화제 수상공연, 수상스포츠(조정경기)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의장과 조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문개방 소식에 충남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농번기철을 맞아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농민들은 심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mm로 평년 292.7mm의 56%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89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1%에 머물고 있다. 금강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보령댐만 보더라도 저수율이 9%대로 떨어지면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령댐 저수율은 27.8%였다.

윤 의장은 “충남 서북부 8개 지역은 유일한 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금강물을 끌어다 쓰는데도 이 정도인데 수문마저 개방할 경우 공주보 하류에서 백제보 사이에 있는 2000ha 규모 농지는 물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길행 의원
[6. 1]



김종문 의원
[6. 8]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거꾸로가는 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 3단계 스쿨넷 사업...업체의 재투자금액 선정 기준 미흡한 데다, 사후대책 부족

충남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후대책과 업체의 재투자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6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도교육청은 3단계 스쿨넷 사업 관련 회선사용료 185억원을 통신사 사업자에 지불했다. 도교육청은 투자 과정에서 노후화 및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포함해 202억원을 통신사업자에게 재투자받기로 했다. 문제는 202억원 재투자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202억원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투자받겠다는 기준이 없고 장비의 소유권도 통신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5년 뒤 통신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재투자한 장비를 사업자가 회수해 가는 등 스쿨넷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충남교육청만 스쿨넷 사업 장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185억원을 투자받은 교육청으로부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02억원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손해보는 금액으로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종필 의원
[6. 26]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충남도 허위 결산서 공시 멈춰야”

- 보조금 집행잔액 160억원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잔액 823억인 것으로 드러나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충남도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 공시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번에 공시될 결산서가 도민을 속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 결산서라는 것인데 무효화 투쟁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6월 26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도민을 우롱하는 허위 결산서 공시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2016년도 결산서 세입 결산액은 5조 3756억 2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403억 3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차입잔액은 3342억 9600만원이다. 또, 보조금 집행액은 2조 3702억원, 집행잔액은 1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원으로 표기됐지만, 집행잔액은 832억 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67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산서상에 미반영 된 것으로, 완전히 허위 결산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결산서의 세출 결산액은 672억원을 감액한 4조 9731억 3100만원이 돼야 할에도 도는 5조 403억 3100만원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결산은 말 그대로 지난 1년 회계를 결산하는 것으로, 단 1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정상분이 본 결산에 다수 누락된 엉터리 결산서를 공시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원주장



총15건

제295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조례안 12, 동의안 1, 예산안 2, / 원안가결 12, 수정가결 3

안건 구분	의안 명	발 의 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시·군 경제조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공휘 의원 (임동욱, 김석근, 김종문, 김종필, 신재원, 유익환, 이종화 의원)	원안 가결	○도내 시·군의 경제조정에 대한 협력적 대안을 마련하고, 통·재정적 자원을 통해 경제 시·군 간 일체화 협조에 의한 경제조정을 유도하여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 경제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계속수급의 도지사 의무 규정 → 경제조정자문을 위한 자문조정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정희 의원 (임기영, 김복만, 김 연, 김원태, 김홍열, 윤지상, 이기철, 조길행 의원)	원안 가결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토피질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도지사의 의무규정 →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및 자원에 관한 사항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윤지상 의원 (임기영, 김 연, 김원태, 김홍열, 이기철, 정정희, 조길행 의원)	원안 가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 역량 강화와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규정 →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청소년거리조성 및 청소년의 날의 지정 근거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충남 양성평등기본 2030과제들의 실행력 강화와 공직자 및 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지속성 확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운영위·분과위 설치근거 신설 → 공무원·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법을 명시(도법위)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개정 사항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로 하는 조항 신설
조례안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백제문화단지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제도 열차 신규 도입·운영에 따른 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백제문화단지 주차장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장) → 백제문화단지 무제도 열차 운행 규정 신설(안 제5장)
조례안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문규 의원 (임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웅규, 송덕민, 유병국, 홍재표 의원)	원안 가결	○충청남도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과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 도지사는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시책 개발·운영 노력 → 주요노동정책심의·자문을 위한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내항만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중국 국제무역항로 개설에 따라 안정적 항로 운항을 위한 국제여객운송사업자 및 정부의 크루즈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도내 항에 크루즈선 유치에 따른 크루즈사업자의 초기장려단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함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센터 및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 가결	○「진로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 하기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2017년도 총액인건비 교육부 확정과 단위기관별·직렬별 인력변동 요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4,074명을 4,067명으로 개정 (안제2조) • 3,781명 → 3,772명(9명 감원) : 교육전문직원 제외 • 교육전문직원 정원 : 283명 → 285명 (2명 증원) • 가족돌봄의 전문요원 2명 증 (교육지원청)

안건 구분	의안 명	발 의 자	처 결 과	주 요 내 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청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 교육청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안 제5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21호~제23호) -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6조) * 소속공무원 경직(가)에 관한 사항(안 제2호) * 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호)																																																																		
조례안	충청남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보완·개정하기 위한 - 교습비등의 표시·제시를 함에 있어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여 표시·제시토록 함 (안 제9의2 제2항) -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산실됨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신설 (학원 : 등록일지, 교습소 : 제지,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증지)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 가결	○취득 <table><tr><th>연번</th><th>기안명</th><th colspan="2">연 재액</th><th>기준가액(천원)</th><th>비고</th></tr><tr><td></td><td rowspan="3">취득개</td><td>토지</td><td></td><td></td><td rowspan="3"></td></tr><tr><td></td><td>건물</td><td>6,624</td><td>11,038,693</td></tr><tr><td></td><td>계</td><td>6,624</td><td>11,038,693</td></tr><tr><td>1</td><td>천안행당초등학교</td><td>토지</td><td></td><td></td><td rowspan="2">교실증축 (기부채납)</td></tr><tr><td></td><td></td><td>건물</td><td>1,494</td><td>2,404,371</td></tr><tr><td>2</td><td>천안차암초등학교</td><td>토지</td><td></td><td></td><td rowspan="2">교실증축</td></tr><tr><td></td><td></td><td>건물</td><td>2,500</td><td>4,326,472</td></tr><tr><td>3</td><td>불암초등학교</td><td>토지</td><td></td><td></td><td rowspan="2">교실증축</td></tr><tr><td></td><td></td><td>건물</td><td>2,630</td><td>4,307,850</td></tr></table>	연번	기안명	연 재액		기준가액(천원)	비고		취득개	토지					건물	6,624	11,038,693		계	6,624	11,038,693	1	천안행당초등학교	토지			교실증축 (기부채납)			건물	1,494	2,404,371	2	천안차암초등학교	토지			교실증축			건물	2,500	4,326,472	3	불암초등학교	토지			교실증축			건물	2,630	4,307,850													
연번	기안명	연 재액		기준가액(천원)	비고																																																																	
	취득개	토지																																																																				
		건물	6,624	11,038,693																																																																		
		계	6,624	11,038,693																																																																		
1	천안행당초등학교	토지			교실증축 (기부채납)																																																																	
		건물	1,494	2,404,371																																																																		
2	천안차암초등학교	토지			교실증축																																																																	
		건물	2,500	4,326,472																																																																		
3	불암초등학교	토지			교실증축																																																																	
		건물	2,630	4,307,850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수정 가결	○세입 (단위: 억원) <table><tr><th>구분</th><th>합계</th><th>이전수입</th><th>차액수입</th><th>세입</th><th>이월금</th></tr><tr><td>기정 예산액(A)</td><td>30,294</td><td>28,006</td><td>415</td><td>1,302</td><td>571</td></tr><tr><td>추경 예산액(B)</td><td>31,746</td><td>29,546</td><td>474</td><td>991</td><td>735</td></tr><tr><td>증 감(B-A)</td><td>1,452</td><td>1,540</td><td>59</td><td>△311</td><td>164</td></tr><tr><td>증감률(%)</td><td>4.8</td><td>5.5</td><td>14.2</td><td>△23.9</td><td>28.8</td></tr></table> ○세출 (단위: 억원) <table><tr><th>기안명</th><th>추경예산안</th><th>기정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h>구성비</th></tr><tr><td>합 계</td><td>31,746</td><td>30,294</td><td>1,452</td><td>4.8</td><td>100</td></tr><tr><td>본 행</td><td>23,286</td><td>22,405</td><td>881</td><td>3.9</td><td>60.7</td></tr><tr><td>자속기관</td><td>229</td><td>213</td><td>16</td><td>7.5</td><td>1.1</td></tr><tr><td>교육지원청</td><td>8,201</td><td>7,675</td><td>526</td><td>6.9</td><td>36.2</td></tr><tr><td>예비비</td><td>30</td><td>-</td><td>30</td><td>-</td><td>2.1</td></tr></table>	구분	합계	이전수입	차액수입	세입	이월금	기정 예산액(A)	30,294	28,006	415	1,302	571	추경 예산액(B)	31,746	29,546	474	991	735	증 감(B-A)	1,452	1,540	59	△311	164	증감률(%)	4.8	5.5	14.2	△23.9	28.8	기안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746	30,294	1,452	4.8	100	본 행	23,286	22,405	881	3.9	60.7	자속기관	229	213	16	7.5	1.1	교육지원청	8,201	7,675	526	6.9	36.2	예비비	30	-	30	-	2.1
구분	합계	이전수입	차액수입	세입	이월금																																																																	
기정 예산액(A)	30,294	28,006	415	1,302	571																																																																	
추경 예산액(B)	31,746	29,546	474	991	735																																																																	
증 감(B-A)	1,452	1,540	59	△311	164																																																																	
증감률(%)	4.8	5.5	14.2	△23.9	28.8																																																																	
기안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746	30,294	1,452	4.8	100																																																																	
본 행	23,286	22,405	881	3.9	60.7																																																																	
자속기관	229	213	16	7.5	1.1																																																																	
교육지원청	8,201	7,675	526	6.9	36.2																																																																	
예비비	30	-	30	-	2.1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수정 가결	○2017년 학교별 운용계획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학교명</th><th rowspan="2">기금 조성액 ㉠</th><th colspan="4">2017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th><th rowspan="2">2017년말 기금잔액 ㉡=㉠-㉢</th></tr><tr><th>교육환경 개선</th><th>교육활동 지원</th><th>교육경영여 강화</th><th>계 ㉢</th></tr><tr><td>이천초</td><td>643,219</td><td>7,028</td><td>80,650</td><td></td><td>67,678</td><td>575,541</td></tr><tr><td>장곡초</td><td>928,333</td><td></td><td>42,000</td><td>14,000</td><td>56,000</td><td>872,333</td></tr><tr><td>금당초</td><td>266,667</td><td></td><td>39,000</td><td>4,000</td><td>43,000</td><td>223,667</td></tr><tr><td>합 계</td><td>1,838,219</td><td>7,028</td><td>141,650</td><td>18,000</td><td>166,678</td><td>1,671,541</td></tr></table>	학교명	기금 조성액 ㉠	2017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17년말 기금잔액 ㉡=㉠-㉢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영여 강화	계 ㉢	이천초	643,219	7,028	80,650		67,678	575,541	장곡초	928,333		42,000	14,000	56,000	872,333	금당초	266,667		39,000	4,000	43,000	223,667	합 계	1,838,219	7,028	141,650	18,000	166,678	1,671,541																											
학교명	기금 조성액 ㉠	2017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17년말 기금잔액 ㉡=㉠-㉢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영여 강화	계 ㉢																																																																	
이천초	643,219	7,028	80,650		67,678	575,541																																																																
장곡초	928,333		42,000	14,000	56,000	872,333																																																																
금당초	266,667		39,000	4,000	43,000	223,667																																																																
합 계	1,838,219	7,028	141,650	18,000	166,678	1,671,541																																																																

총23건

제296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결산승인안 6, 조례안 15, 동의안 1, 결의안 1 / 원안가결 23

안건 구분	의안 명	발 의 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 가결	○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회계별</th><th rowspan="2">세입</th><th rowspan="2">세출</th><th colspan="4">잉여금</th></tr><tr><th>소지</th><th>이월금</th><th>보통금 집행잔액</th><th>순세지 잉여금</th></tr><tr><td>합계</td><td>7,130,937</td><td>6,304,840</td><td>825,997</td><td>208,315</td><td>13,730</td><td>603,952</td></tr><tr><td>일반회계</td><td>5,375,627</td><td>5,040,331</td><td>335,296</td><td>156,832</td><td>13,679</td><td>164,785</td></tr><tr><td>공기업 특별회계</td><td>1,193,192</td><td>779,947</td><td>413,245</td><td>-</td><td>-</td><td>413,245</td></tr><tr><td>기타 특별회계</td><td>562,018</td><td>4,84,562</td><td>77,456</td><td>51,483</td><td>51</td><td>25,922</td></tr></table>	회계별	세입	세출	잉여금				소지	이월금	보통금 집행잔액	순세지 잉여금	합계	7,130,937	6,304,840	825,997	208,315	13,730	603,952	일반회계	5,375,627	5,040,331	335,296	156,832	13,679	164,785	공기업 특별회계	1,193,192	779,947	413,245	-	-	413,245	기타 특별회계	562,018	4,84,562	77,456	51,483	51	25,922
회계별	세입	세출	잉여금																																								
			소지	이월금	보통금 집행잔액	순세지 잉여금																																					
합계	7,130,937	6,304,840	825,997	208,315	13,730	603,952																																					
일반회계	5,375,627	5,040,331	335,296	156,832	13,679	164,785																																					
공기업 특별회계	1,193,192	779,947	413,245	-	-	413,245																																					
기타 특별회계	562,018	4,84,562	77,456	51,483	51	25,922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 가결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 - 예산액 : 44억 5천 9백만원 - 지출결정액 : 89억 1천 8백만원 - 지출액 : 74억 5천 9백만원 - 이월액 : 9억 5천만원 - 집행잔액 : 1억 7백만원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회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 가결	○ 기금결산 총괄 - 2015년도말 현재액 : 2,267억 5천 9백만원 - 2016년도중증감액 : 80억 1천 9백만원 - 2016년도말 현재액 : 2,347억 7천 4백만원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 가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table><tr><th>구분</th><th>예산현액</th><th>결산액</th><th>비고</th></tr><tr><td>세입(교)</td><td>3,362,587,488,350</td><td>3,259,340,844,340</td><td></td></tr><tr><td>세출(교)</td><td>3,362,587,488,350</td><td>3,040,310,067,250</td><td></td></tr><tr><td>잉여금 (교-남)</td><td>0</td><td>219,036,777,090</td><td>· 다음연도이월액 : 285,491,936,490 · 순세지잉여금 : 466,461,127,400</td></tr></table>	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세입(교)	3,362,587,488,350	3,259,340,844,340		세출(교)	3,362,587,488,350	3,040,310,067,250		잉여금 (교-남)	0	219,036,777,090	· 다음연도이월액 : 285,491,936,490 · 순세지잉여금 : 466,461,127,400																							
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세입(교)	3,362,587,488,350	3,259,340,844,340																																									
세출(교)	3,362,587,488,350	3,040,310,067,250																																									
잉여금 (교-남)	0	219,036,777,090	· 다음연도이월액 : 285,491,936,490 · 순세지잉여금 : 466,461,127,400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 가결	○ 예비비 지출내역 <table><tr><th>사업내용</th><th>지출결정일</th><th>지출결정액</th><th>지출액</th><th>다음연도이월액</th><th>잔액</th></tr><tr><td>서천정형초 인계말제지붕과목구</td><td>2016.06.07</td><td>72,576,000</td><td>72,576,000</td><td>0</td><td>0</td></tr><tr><td>학교유래연구회 운영자금</td><td>2016.07.22</td><td>4,012,047,000</td><td>830,813,830</td><td>3,166,889,000</td><td>14,244,170</td></tr><tr><td>소송비용지급</td><td>2016.12.16</td><td>33,569,000</td><td>33,439,040</td><td>0</td><td>129,960</td></tr><tr><td>계</td><td></td><td>4,118,192,000</td><td>936,828,870</td><td>3,166,889,000</td><td>14,474,130</td></tr></table>	사업내용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잔액	서천정형초 인계말제지붕과목구	2016.06.07	72,576,000	72,576,000	0	0	학교유래연구회 운영자금	2016.07.22	4,012,047,000	830,813,830	3,166,889,000	14,244,170	소송비용지급	2016.12.16	33,569,000	33,439,040	0	129,960	계		4,118,192,000	936,828,870	3,166,889,000	14,474,130									
사업내용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잔액																																						
서천정형초 인계말제지붕과목구	2016.06.07	72,576,000	72,576,000	0	0																																						
학교유래연구회 운영자금	2016.07.22	4,012,047,000	830,813,830	3,166,889,000	14,244,170																																						
소송비용지급	2016.12.16	33,569,000	33,439,040	0	129,960																																						
계		4,118,192,000	936,828,870	3,166,889,000	14,474,130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 가결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현황 - 2015년도말 현재액 : 231억 2,213만 8,780원 - 2016년도중증감액 : 44억 6,009만 140원 - 2016년도말 현재액 : 275억 8,222만 8,920원																																							
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따른 미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대금·반납금·과외납금 등 분할납부 이자를 조정 [기존연2~3%의 이자 → 분할행위처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조례」시행에 따른 미정리사항 삭제 ※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연혁 기준' 삭제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재충정 동수수로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로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화성동명 발금수로 삭제한 별표 8 8 (현행 12만 800원 → (개정) 삭제)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 및 채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도세의 징수 및 채납처분 관련 조정을 포괄하여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으로 이관하고자 하되 조정을 반영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12.31.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법제처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일부개정 → 도세감면조례 일괄제정용 기안(현행 3년) • 당초 2016.12.31. → 변경 2019.12.31.까지 → 감면율 범위 축소(제5조) • 당초 50% → 변경 25%
조례안	충청남도 침전유공자 여우 및 지렁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무렵의 : 김원태 의원 (김기영, 김 연, 김홍열, 윤지강, 이기철, 정정희, 조길형 의원)	원안 가결	0 침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기 위함 → 복지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5조 제3호) (수급방법 : 재물)
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종합체육회)에 따라 법제에 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전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사무처장을 통합체육회 사무처장 1인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3항 제1호) → 전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일 단체 장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출연: 10백만 원 → 충남문화재단 출연: 40백만 원 • 지역역사문화발전 및 네트워크 강화 → 미디어 전시회 지원사업(아니나 사전면) → 충남문화유산진흥 출연: 30백만 원 • 지역특화 스포츠 운영사업
조례안	충청남도 농축산물유통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행정대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공단 경영 개선안(행 104.5)에 따라 충청남도 농축산물유통센터관리공사를 16.12.28일자로 최종 청산종결통기완료 하였고, 관련조례 「충청남도 농축산물유통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 중부농축산물유통센터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행정대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공단 경영 개선안(행 104.5)에 따라 충청남도 농축산물유통센터관리공사를 16.12.28일자로 최종 청산종결통기완료 하였고, 관련조례 「충청남도 중부농축산물유통센터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2개소(대전시도농산 1, 당진시 행당도 1) 중 대전시도농산 소재 전시판매장이 대략 2016.12월말에 따라 판매장 주소 삭제 정리
조례안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 제2조 관련 별표)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0 지역의회 소방연합회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 → 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지역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임기 3년 보장(안 제22조)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무렵의 : 장기웅 의원 (김용필, 박나구, 서홍달, 오세근, 오인철, 유병국, 이윤호, 이진환 의원)	원안 가결	0 충청남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0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내용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시행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결의안	가물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무렵의 : 김용규 의원 (강용필, 김경선, 김문규, 송덕민, 유병국, 김복환, 홍재모 의원)	원안 가결	0 정부는 국산한 가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청남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등 가뭄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 가결	0 시·군·구를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해례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령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5조 제1항제5호)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04. 12 - 유병국 대표)

충남도의회, 도내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활동 돌입

유병국 의원,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 세미나 개최...공공외교 현황 및 문제점 공유

충남도의회가 지방공공외교 정책 개선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4월 12일 공주 한옥마을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방공공외교 및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유병국 의원(천안3)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보호주의, 사드를 둘러싼 대중국 교역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공공외교의 정의와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충남의 공공외교 현황과 문제점,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콘텐츠 국제화 및 국제협력 세력화에 대한 매뉴얼

개발 시급성도 제시했다.

유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연구모임 회원 간 정보공유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의식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의정토론회(04. 13 - 김 연 대표)

충남도의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마련 앞장

대부분 성인으로 전환되기 위한 적절한 교육 등 미흡...역할 수행 불능

충남지역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성인으로 전환되기 위한 적절한 교육 등이 미흡해 보편적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4월 13일 천안시 NGO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발제를, 박종균 * 교수를 비롯한 이원우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객근수 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룡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총장, 이창숙 발달장애인전통문화예술단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우주형 교수가 준비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1만17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가 12만 6406명인 것으로 비하면 딱 9.3%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추가로 투입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 교수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보다 약 50만원 이상이 추가

로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고용률 역시 15.7%로, 평균 37.6%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독립생활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연구 및 토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05. 17 - 김응규 대표)

충남도의회, “소·돼지 등 축사 절반 가량 무허가…적법화 서둘러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제도개선 불구하고 관계 법령 위반

충남지역 소·돼지·닭 등을 키우는 1만7396호의 축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배출시설과 견폐울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5월 17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응규 의원(아산2)이 좌장을,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사무관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택수 도 친환경축산팀장과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문 사무관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사 6만190호 중에서 배출시설 및 견폐울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615호(4.3%)에 불과하다. 1만2963호(21.5%)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축사는 무허가 상태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만7396호 중 무허가 축사가 8523호(49%)에 이르렀다.

김응규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 농림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05. 25 - 홍성현 대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수혜 불균형 해소해야”

의소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2차 회의 열고 소방여건 분석 및 개선 필요 의견 나눠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은 5월 25일 천안동남소방서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수혜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다.

홍성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역할 정립을 위해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여건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마을 소방수혜 불균형 해소와 의용소방대의 업무비 중 저하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 대표는 “점차 화재전압 외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마을 자치소방 구현을 위한 주제로서 활동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만큼, 의용소방대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난해부터 시행하는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는 좋은 사

례가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연구모임 활동 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의용소방대는 367개대 899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재·구조·구급활동 지원 등 3110회 241774명이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05. 18
지방의회 발
전방안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정부에 지방의회 발전방안 시행 건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현 가능성 '장밋빛 기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는 5월 18일 광주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 정책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19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내용과 회신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건의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권, 인사 청문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해선 '부분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회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단체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확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인사권 독립의 경우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골자로 하는 만큼 향후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만 보더라도 인사는 국회의장에게 부여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전문성이 확보돼 보다 활발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것이다.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회 여야 대표, 정부 등에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담은 내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05. 24
정책자문위
위촉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 위촉식 개최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방의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의견 제시 당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는 5월 24일 대구시 중구 한 호텔에서 제6기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 회장은 이날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회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후원회제도 도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책 자문위가 향후 다양한 논의와 정책 협의를 거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제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05. 30
강원 산불
이재민 위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위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30일 강원도 강릉·삼척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성금 500만원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했다.

05. 30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 기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이 이끈다”
-지방 4대협의체와 평창 조직위 간 업무협약...힘 모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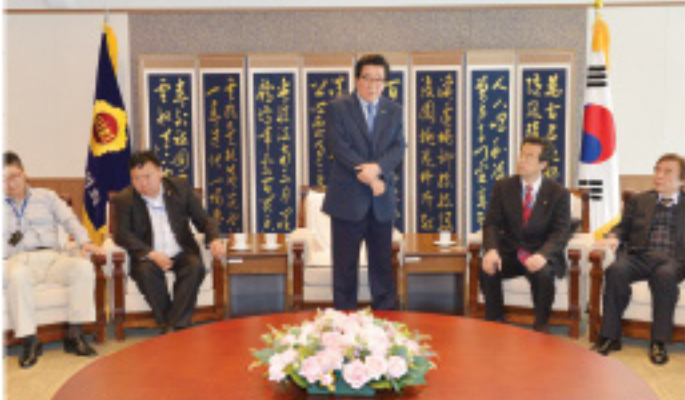
지방 4대 협의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결집한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이희범 위원장은 5월 30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조직위사무소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평창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적인 이슈와 이벤트 등 국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입장권 및 기념주화 구입 등 범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회홍보와 문화행사, 성화봉송, 라이브사이트, 관광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 및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우수인력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버스 및 리프트차량 지원 등 조직위와 함께 협업하기로 했다.

윤석우 회장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지역행사가 아닌 국가 대사인 만큼 지방에서 앞장서겠다”며 “범국민 불입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 성화봉송, 인력지원 등에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01

02

03

04

01_4월28일 | 윤석우 의장은 도지사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02_4월28일 | 윤석우 의장은 도의회 국제회의장에서 동북아평화 교류단을 접견했다.

03_5월 1일 | 윤석우 의장은 환경부에서 이정설 차관을 만나 계산 생태탐방 체험시설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04_5월11일 | 윤자상 의원은 이성순 화백의 송죽 문양화 (115cm x 230cm) 1점을 충청남도의회에 기증했다.



05_5월12일 | 윤석우 의장, 조길행 의원, 윤자상 의원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신축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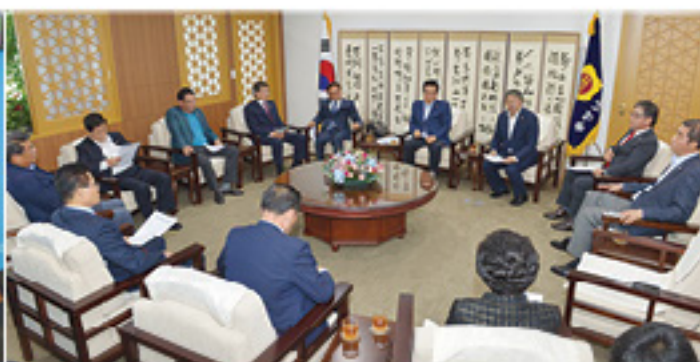
06_5월16일 | 정정희문복위 위원장은 아산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07_5월22일 | 윤석우 의장은 도청브리핑실에서 가자 간담회를 열고 KTX역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08_5월25일 | 윤석우 의장, 신자원 제1부위원장, 조치연 제2부위원장, 강웅일 농경환위 위원장, 김석근 엑스포지원특위 위원장, 김복만 의원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찾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 09_5월26일 | 윤석우 의장은 부여롯데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 10_5월30일 | 윤석우 의장, 조길행 의원, 김원태 의원은 공주 백제채국관에서 열린 제18회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참석했다.
- 11_6월 6일 |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의장, 조치연 제2부의장, 강용일 농경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문복위 위원장, 김명선 의원, 이윤호 의원은 가뭄 피해가 극심한 당진시 정미면 모퉁밭을 찾아가 물대책을 점검했다.
- 12_6월 8일 | 오재근 의원은 충남보훈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했다.



13_6월 9일 | 조차연 제2부의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14_6월13일 | 윤석우 의장, 김종문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충남시군의회의장들과 접견했다.

15_6월13일 |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2분기 충남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했다.

16_6월14일 |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의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공약 이행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다.

17_6월15일 | 윤석우 의장, 김건 의원, 이공휘 의원은 충남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 18_6월15일 |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계룡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19_6월16일 | 김석근 엑스포지원특위 위원장, 김복만 의원은 금산 다락원에서 열린 금산세계민삼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20_6월19일 |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 충남 치안협의회에 참석했다.
 21_6월23일 | 윤석우 의장, 오배근 의원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6.25전쟁 6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 22_6월26일** | 강용일농경환경위 위원장은 충남도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가뭄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주문했다.
- 23_6월29일** | 윤석우 의장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7년 국제 입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 24_6월30일** | 윤석우 의장, 이공휘 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4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느낌 여행 충남



[청양]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기간 : 2017.9.8. ~ 9.10.

장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3-17

연락처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041-940-2301

“청양군”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에 고추가 있다. 청양고추는 피파가 두꺼워 가루가 많이 생산되고 색깔이 좋으며 감칠맛이 좋아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여러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칠갑산 기슭에서 100년 넘게 재배해온 귀한 작물, 구기자가 유명하다. 구기자는 정월에 뿌리를 캐서 2월까지 먹고, 3월에는 줄기를 캐어 4월까지 먹으며, 5월에는 잎을 따서 6월까지 먹고, 7월에는 꽃을 따서 8월까지 먹으며, 9월에는 열매를 따서 10월까지 먹는다. 이렇게 구기자를 사시사철 먹으면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기자는 불로장생의 상징이기도 하다.

청양고추·구기자축제는 청양고추와 청양구기자 브랜드가치를 중대시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7080콘서트, 국악한마당, 어머니 댄스 경연대회, 퓨전밴드 공연,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축제행사가 열리며 다채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



[보령]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 2017.9.9. ~ 9.11.

장소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무창포해수욕장

연락처 :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61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무창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의 1.5km의 물길라짐 현상을 모티브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음력 보름과 그믐에 열리는 바닷길에 맞추어 개최되며, 연애인들의 축하공연, 햇불어업체험 및 신비의 바닷길 햇불대행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맨손고기잡이 체험, 독살어업생태체험, 비자막집게체험, 맛살집게체험, 선상가두리 낚시체험과 조개까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 충청남도 지역항도문화축제로 지정, 한단계 격상 추진하는 무창포해수욕장은 1928년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며 올해로 80돌을 맞이하여 더욱 뜻깊은 축제로 개최하게 될 것이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전자퓨전밴드, 마술공연, 불꽃공연, 햇불대행진 등 다양한 축제행사가 열리며 독살어업체험, 조개잡기, 맨손고기잡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041-635-5054)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은 금지됩니다.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http://blog.naver.com/cncouncil>
-  <http://www.facebook.com/cncouncilNP>
-  <http://mobile.twitter.com/council>
-  카카오톡에서 Cnc12검색 후 추가하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방법

- 이메일 : min1229@korea.kr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